

문재인 정부는 동반자 되기에 많이 부족하다 노동자 세력 강화에 지름길은 없다

특별
증면호

변화하고
있는 정세

3~4면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과
평화 운동

4면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
문재인 집권 반 년

14면

민주노총
임원 선거

13면

노동운동의 쟁점들

공공부문 정규직화 2면

노동시간 단축 5면

문재인 정부의 공정임금 6~7면

사회적 합의 8~9면

정규직·비정규직 연대 11면

한국GM 투쟁 16면

네덜란드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사회적 대타협은
어떻게 노동운동을
약화시켰나

10면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제대로 정규직화하고 처우를 대폭 개선하라

문재인 정부의 핵심 노동 정책인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은 추진 4개월 만에 별 볼 일 없음이 분명해졌다.

7월 20일 정부가 내놓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전환”과 간접고용 비정규직 대책을 포함한 점이 핵심이었다. 그런데 10월 하순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말이 꼭 들어맞았다.

첫째, 정부는 2020년까지 20만 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말이 정규직이지, 전환 대상의 대다수는 무기계약직이거나 자회사로 채용된다. 온전한 정규직화와는 거리가 멀다.

더구나 그 대상은 정부가 스스로 집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41만 6000명 중에서도 49퍼센트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제로’는 근처에도 가지 못한 것이다. 정부가 상시·지속 비정규직이라고 인정한 14만 1000명(60세 이상 고령자, 기간제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등)을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래 놓고 정부는 이번 계획이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채용 관행을 확립”한 것이라고 자화자찬한다. 그러나 온갖 예외 사유를 두어 무기계약직화조차 최소화하고 새로운 기간제 채용을 지속해 온 이전 정부들과 비교해 봐도, 별로 나은 수준이 못 된다.

둘째, 이번 대책에서 가장 주목 받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거의 사기에 가깝다는 것이 드러났다. 파견·용역의 40퍼센트가 제외됐을 뿐만 아니라, 전환 대상 대부분이 자회



누더기 비정규직 대책에 항의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었다

사 고용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 간접고용 문제 해결의 시금석으로 여겨진 인천공항공사에서 사측은 1만 명 중 고작 500~800명만 직접 고용하고, 대다수는 자회사로 전환하는 안을 내놓았다. 철도공사도 간접고용 9187명 중 고작 15퍼센트인 1337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 두 곳 모두 정부가 선정한 정규직 전환 ‘전략기관’인데도 이 모양이다.

셋째, 이런 전환조차 비정규직 고용 승계가 아니라 공개 채용을 한다고 하니, 일부 노동자들은 해고가 될 수도 있다. 채용되더라도 신규채용이라는 이유로 기존의 경력과 근속을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정부와 공공기관들은 ‘형평성’ 잣대를 들이대 이를 정당화하지만, 완전한 위선이다. 정부는 비용 절감을 압박해

공공부문에 비정규직을 양산해 온 주범으로, 비정규직의 열악한 조건에 책임이 있다. 이 노동자들을 고용 승계하고 처우 개선하는 것은 불공정한 ‘특혜’가 전혀 아니다.

생색내기 수준의 처우 개선

넷째, 비정규직 대책에서 고용 안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처우 개선이다. 그런데 정부는 기존의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아예 대책에 포함하지 않았다.

학교비정규직 노조들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근속수당 인상을 요구하며 집회, 농성, 단식까지 하며 싸웠다.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교육부가 일부 인상을 내놓았지만,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는 공격이 함께 벌어졌다.

새롭게 무기계약직이 되거나 자회

사로 고용되는 이들의 처우 개선도 미미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정부가 “재정 부담 최소화”를 거듭 밝히고 있어서다. 그에 대한 예산도 아예 책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각 기관들은 ‘기재부가 여전히 돈을 쥐고 있다’며 알아서 규모를 최소화하고, 처우 개선도 극히 미미한 계획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11월 중에 청소·시설관리 등 주요 직종의 ‘임금체계 표준모델’을 내놓을 계획인데, “일률적인 호봉제 적용을 지양”한다고 못 박고 있다.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노동연구원 측은 비정규직의 임금체계로 직무급제를 제시해 왔다. 이는 ‘직무 차이’를 명분으로 비정규직의 저임금을 정당화하고, 호봉에 따른 인상을 없애 임금을 억제하겠다는 의미다.

한편, 철도공사 사측은 “기존 직원

인건비 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도 비정규직에 대한 매우 미흡한 수준의 처우 개선에 머무르고는, ‘노동자 사이에 격차가 줄지 않고 있다’며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억제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려 한다. 전반적인 상향평준화가 아니라, 바닥을 조금 끌어올리고 위를 끌어내려 전반적인 임금 비용을 줄이려 하는 것이다. 정부가 ‘공정임금 체계 확립’을 운운하는 것은 바로 이런 목적이다.

그 점에서, 노동자 간 격차 축소에 주목하는 일부 노동운동 지도자들과 학자들이 ‘정규직 노조의 기득권 유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걸림돌’이라고 비판한다든가, 정규직 노조가 직무급제 도입을 수용하는 ‘사회적 대타협’에 나서는 것이 “연대성”이고 “계급성”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위험하다.

서울지하철노조 집행부가 일부 보수적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반대를 추수해 온전한 정규직화에서 후퇴한 입장을 공식으로 채택한 것은 유감이다. 정부는 이런 반발을 조장하고 키운 책임이 있다. 재원을 책임지지 않아 정규직의 임금·조건이 압박 받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에게 정규직화와 처우 개선을 위한 재정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며 투쟁해야 한다. 그래야 노동자들이 반목하지 않을 수 있고, 무엇보다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쟁취할 수 있다.

그러려면 문재인이 개혁이 좌초할까 걱정하며 ‘비판적 협력자’로 자리매김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독립적으로 노동자들의 투쟁을 고무하고 확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정원

무늬조차 건어낸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상징한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약속은 사실상 “사기”에 불과했다.

‘연내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는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항공동화시설, 전력시설 등 운항·항행 관련 노동자들만 직접고용 하겠다고 밝혔다. 그 수는 고작 500~800명에 불과하다. 그조차도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형평성”을 말하며 공개 경쟁 채용 방식을 택하겠다고 한다. 십수 년을 일한 베테랑 노동자 중 일부가 경쟁 채용 과정에서 탈락해 해고될 수 있음을 뜻한다.

나머지 9000여 명은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하고, 처우 개선도 최소화하려 한다. 또한, 노동자들을 줄 세우는 데 이용해 온 ‘성과공유급’(명절 때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해 온 성과급)도 유지하겠다고 한다. 아예 자회사 전환조차 제외된 노동자들도 있다.(공항터미널 카트, 주차대행, 수하물 보안검색장비 유지보수 등)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원이 될 거라 기대했던 노동자들은 정부와 사측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결국 용역업체에서 자회사 소속으로 무늬만 바꾼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7월에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 자회사 방안을 제시하며 예견된 일이었다. 정규직 채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회사 방식을 활용해 온 공공기관에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피해가도록 날개를 달아 줬기 때문이다.

자회사는 원청이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대부분 결정하면서도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또 다른 간접고용에 불과하다. 또, 자회사는 경영 여건에 따라 구조조정 등이 용이하고,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하기도 수월하다. 공공기관장들 사이에서 ‘자회사 방식이 상황 대처에 용이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인천공항공사가 설립한 자회사 인천

공항운영관리(주) 초대 사장에 노조 파괴 혐의를 받는 한국GM 전 부사장 장동우를 선임한 것도 큰 불만 사항이다. 이 자는 2001년 대우차 정리해고 당시 노무담당 총괄 임원이었고, 2007년에는 노조 파괴 전문업체인 창조컨설팅과 계약해 노동자를 공격한 바 있다.

사측의 이런 행태에 노동자들의 불만이 상당하다. 최근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노·사·전문가협의회’ 불참을 선언했으나, 사측이 재는의를 하겠다고 한 발 물려서 교섭이 재개될 예정이다.

그러나 사측이 입장을 철회한 것은 아니므로 앞으로의 교섭도 불안정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노동자들의 투쟁이 뒷받침되어야만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강제할 수 있을 것이다. 8년 전 800여 명으로 시작한 노동조합이 어느새 3500여 명으로 늘어 노동자들의 힘도 더 세졌다.

박성환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노동자연대는 이윤을 위해 노동자 대중의 삶을 희생시키는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이와는 다른 세계를 추구하는 노동자 운동 단체입니다.

노동자연대는 다른 세상을 만들 힘은 노동자 계급과 피억압 대중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에 있다고 믿으며, 노동자 투쟁에 참여하고, 연대를 건설하고, 투쟁 승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노동자·학생·청년 등으로 구성돼 있고,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울산, 강원충북 등에 지회들이 있습니다. 전교조·공무원·금속·건설 등에 노동자 모임이 있으며, 더 많은 부문에서 노동자 모임을 만들려 합니다.

이름

이메일

소속 (☐ 직장 | ☐ 노조 | ☐ 대학교 | ☐ 중고등학교 | ☐ 기타)

[선택] 휴대전화번호

회비약정액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2만 원 | ☐ 3만 원 | ☐ 4만 원 | ☐ 5만 원 | ☐ 기타 () 원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www.workerssolidarity.org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909-2026 또는 mail@workerssolidarity.org로 보내 주세요.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02-2271-2395 / 팩스 02-2271-2396 / 이메일 mail@workerssolidarity.org

국내외 정세가 변하고 있다

최일봉

현 상황을 2011년과의 선명한 대비를 통해 파악해 보자. 2011년은 아래와 같은 대사건들이 일어났다.

- 이집트를 비롯한 아랍 혁명.
- 스페인 '분노한 사람들'의 5·15 운동.
- 미국과 그리스 등지의 오쿠파이 운동.
- 유럽 일부의 파업 운동과 유럽 전역의 노동조합 시위.
- 영국의 폭동과 200만 명 연금 파업.
- 한국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투쟁과 희망버스의 성공적 동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2011년을 '제2의 1968년'이라고도 불렀다.

특히, 아랍 혁명은 21세기가 혁명의 세기가 될 것임을 확인해 줬다.

물론 2011년의 투쟁들은 그 즉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특히, 이집트와 시리아에서는 반혁명이 성공했다.

하지만 즉각적 성과를 못 거뒀다고 해서 급진화의 효과가 없어진 건 아니다. 급진화는 이후 그리스 등 일부 유럽 나라들에서 좌파적 개혁주의의 급부상이라는 효과를 냈던 것이다. 2015년 그리스에서 시리아 정부가 등장했다.

그리고 스페인에서 포데모스가 부상하고 있고, 영국에서 제러미 코빈과

그의 좌파 지지자들이 노동당 지도부를 장악했다.

비록 너무 쉽게 양보했지만 미국 버니 샌더스 현상도 중요하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중심부에서 일어난 반항의 목소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7년 지금 포데모스와 코빈 노동당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크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좌파의 분열이 심하다. 2000년대 초·중반에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와 이라크 전쟁 반대가 결합돼 전개된 대안세계화운동이 이력저력 주요 좌파들을 결속시킬 수 있었다.

2000년대 초·중반 한국에서는 NL과 NGO, 민주노동당 등과 함께 일부 급진좌파도 대안세계화운동에서 일정한 몫을 담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8년 촛불 운동 패배와 이후 지속돼 온 경기 침체가 상호작용을 한 결과, 지금 진보·좌파 진영의 분열과 균열은 심각하다.

유럽에서 분열과 균열의 주요인은 좌파적 개혁주의와 이슬람 문제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지정학적 긴장과 불안정으로 북한 핵무기 문제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 돼 왔다. 하지만 “사회적 대화”라는 말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 하의 노사관계 문제도 못지않게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것이다.



“화염과 분노”로 가득했던 트럼프의 유엔 연설

한국 — 개혁주의의 부상

이 소절에서는 한국의 개혁주의에 대해 얘기해 보기로 한다. 1년 전 박근혜 퇴진 운동이 마침내 결실을 거둬 지금 개혁주의가 부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친자본주의적 개혁주의이지만, 천대받는 민중 속에서 여권을 지지하는 세력은 친자본주의적이지 않은 개혁주의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비록 박근혜 퇴진 운동이 혁명은 아니었지만, 그 운동의 최초 수혜자가 개혁주의라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비슷한 역학관계가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1917년 2월 혁명 후 열린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 대의원 1000명 가운데 볼셰비키 당원은 겨우 60명밖에 안 되었다. 나머지는 죄다 개혁주의자들이었다.

이는 노동자 대중의 의식이 모순돼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 대중은 지배계급의 관념들을 일부 받아들이거나 일부 적응하면서도, 일부 거부하고 변화를 향한 염원을 키우는 모습을 보인다.

가령 문재인 정부의 어중간한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노동계급의 당혹스런 반응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정부의 대북·대미 정책이 반동적인데도 노동자들이 북한 핵과 미국의 핵우산과 구여권의 재기 가능성 등을 의식해 대체로 수용하는 듯한 정서인 것도 모순된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촛불 운동에서 별로 한 일이 없는 문재인과 민주당의 부상 자체가 대중의 모순된 의식의 (단기적) 효과라고 할 수 있다.

개혁주의는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 정의당만이 개혁주의 세력인 것은 아니다. 다른 많은 조류들이 있다. 노동당은 좌파적인 개혁주의 정당이다. 민중당은 개혁주의 정당이라기보다는 스탈린주의 정당이지만, 대개 좌파적 개혁주의 노선을 걷는다.(때로는 NGO들을 추수하느라 전혀 좌파적이라고 할 수 없는 너무 온건한 개혁 노선을 취한다.)

오늘날 선진 자본주의 세계에서 부상하는 개혁주의 세력은 19세기 말의 고전적 사회민주주의와 닮은, 즉 좌파적인 사회민주주의이다. 비록 시리아와 포데모스, 코빈의 영국 노동당 등 상이한 변형들이 있지만 말이다.

페미니즘이라는 운동도 대부분 개혁주의의 일부다. 페미니즘은 계급을 초월한 여성의 단결이라는 계급 협력 사상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페미니즘 가운데는 매우 급진적인 조류가 있다.(필자는 이를 초超越페미니즘이라고 부른 적이 있다.) 하지만 이들의 급진성은 젠더 이분법적 세계관이라는 면에서 그렇다는 것이지, 자본주의 체제를 혁명적으로 전복하는



연진오(NGO)는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를 상향수 배출한 개혁주의의 한 형태다

문제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물론 개혁주의의 득세에 직면해 ‘혁명가들은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없어’하고 생각한다면 그릇된 결론일 것이다.

왜냐하면 1970년대 이후로는 과거와 달리 장기화하고 있는 경제 침체로 자본주의가 양보를 매우 꺼리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옛 소련 블록 몰락의 결과, 국가 권력을 지렛대 삼아 사회 개혁을 한다는 좌파적 개혁주의의 이상과 방향성이 동요하고 있고 그다지 신뢰받지도 못하고 있다.

트럼프의 제국주의적 공세

지금 한국의 국내 정치에서 개혁주의가 부상하고 있다면, 동북아시아 지정학 분야에서는 트럼프를 배출한 정치적 압력이 이 지역으로 넘쳐 들어오고 있다. 트로츠키는 제국주의 국가의 대외 정책은 국내 정책의 연장이라고 지적했다.

동북아시아 지역은 중국과 일본과 한국의 경제들이 자리 잡고 있는, 세계 자본주의의 가장 역동적인 부분이다. 그런 만큼 이 지역은 제국주의적 경쟁도 가장 격심한 지역이다. 정부 각료직에서는 물러났지만 여전히 영향력 있는 트럼프 자문 스티븐 배넌은 지난 8월 16일 이렇게 말했다. “중국과의 경제 전쟁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전임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중국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설립을 주도하고 자기 나름의 ‘실크로드’를 유라시아 지역에 구축하는 등의 일이 세계경제 내에서의 미국의 위상을 약화시킬까 봐 우려했다. 그래서 그는 적극적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추진하고 아시아 국가들의 동참을 유도했다. 비록 트럼프는 (시진핑에게는 반갑게도) TPP에서 탈퇴했지만 말이다.

오바마 하에서는 트럼프 하에서는 미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지역에서 군사력

균형이 중국 쪽으로 약간 이동했다는 국방부 보고가 있었는데, 이에 트럼프는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게다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 대해 손잡는 것도 미국에게는 악몽의 시나리오다. 미 국방부의 위임을 받은 전략국제연구센터가 이 우려를 심각하게 표현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트럼프의 ‘러시아 스캔들’(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에 대한 수사도 트럼프의 친러시아 성향에 대한 견제의 성격을 품고 있다.

이런 첨예한 제국주의적 갈등 상황에서 최근에는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을 하고 일본열도를 넘어가는 미사일 실험을 했다.

그리고 미국은 21세기 들어 처음으로 미군 전투기와 폭격기를 북한 앞바다로 비행하게 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트럼프의 험악한 말이나, 미국이나 북한 어느 한쪽의 계산 착오로 재래식 전쟁이나 심지어 핵전쟁도 일어날 수 있다. 당장은 아닐지라도 또한 그다지 먼 미래가 아닐 수도 있다.

특히, 트럼프의 두 달 전 UN 총회 연설은 실로 으스스했다. 그 연설의 핵심 메시지는 미국 우선주의였는데, “국권,” “주권”이라는 말을 무려 22번이나 연설에서 사용했다.

▶ 4면으로 이어짐

트럼프의 동아시아 순방

“이제는 힘의 시대”임을 선언하다

김영익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 이후 처음으로 동아시아를 순방하고 있다.

트럼프가 순방 길에 오를 때 미국 국내에서 그의 입지는 그리 좋지 않았다. 특별검사 물러가 트럼프 대선 캠프 핵심 관계자들을 러시아와 내통한 혐의로 기소했다. 트럼프의 지지율은 최저치를 찍었다. 이를 반영하듯, 11월 7일 미국 50여 곳에서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했다. 트럼프는 동아시아 순방을 통해 이런 처지를 만회할 필요가 컸다.

트럼프는 아이시스(ISIS, 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 몰락 이후 중동 질서의 재편 문제도 신경 쓰일 것이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파워 게임 때문에 레바논 등지에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11월 9일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지적했다. “지난 며칠 동안 걸프 지역[페르시아 만]의 긴장을 높이는 일련의 일들이 벌어졌다. 오랫동안 수면 아래서 진행되던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숙적 이란 사이의 냉전이 머지않아 열전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트럼프는 중동 상황과 국내 세력 관계 그리고 자신이 지난 수개월 동안 긴장을 엄청 높여 놓은 동아시아에서 자신의 지도력을 증명하는 과제가 있다.

트럼프의 순방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정은 중국 방문이었다. 중국은 그



트럼프와 시진핑 두 호전적 제국주의자들

에게 2535억 달러어치 구매·투자 계약이라는 통 큰 선물을 안겨 줬다.(그중 대부분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북핵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었지만, 시진핑은 이번에도 트럼프의 대북 압박 요구를 다 수용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도 확실한 거래를 요구했다. 아베와 문재인 모두 그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애썼다. 문재인은 경찰력을 2만 명 가까이 투입해 반트럼프 시위대를 가로막고, 트럼프와 나란히 서서

대북 압박 강화를 약속했다. 일본과 한국은 트럼프에게 막대한 무기 수입과 대미 투자도 약속했다.

인도-태평양

그러나 트럼프가 아베와 문재인에게서 100퍼센트를 얻은 것은 아니었다. 아베 정부는 트럼프가 버린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고, 트럼프가 선호하는 양자 무역 협상에는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트럼프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

한 공개 지지를 유보했다.(물론 문재인은 노무현처럼 ‘마음은 균형외교, 몸은 한-미-(일) 동맹’으로 기을 공산이 크다.)

반면 중국 시진핑은 이제 중국이 자유 무역과 세계화의 수호자라고 과시하며, ‘일대일로’ 전략으로 트럼프가 버리고 간 빈자리를 채우겠다고 달려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은 군사와 경제 모두 세계 최강이고, 미국의 패권을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수호하겠다는 트럼프의 의지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트럼프가 순방 중일 때 “누구도 필적할 수 없는” 미국 항공모함 3척이 서태

평양에서 연합 훈련 준비에 들어갔다. 8일 미국 상하원협의회는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13.1퍼센트나 증액한 국방수권법안에 합의했다. 문재인이 마련한 국회 연단에서 트럼프가 “이제는 변명의 시대가 아니라 힘의 시대”라고 선언한 것을 눈여겨보아야 하는 까닭이다.

이번 순방 이후에도, 흔들리는 패권을 다잡기 위한 트럼프의 위험한 도박은 계속될 것이다. 제국주의 간 경쟁 속에 한반도 긴장 고조 상황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고, 진보·좌파가 평화 운동을 건설해야 할 필요는 더 커질 것이다.

▶ 3면에서 이어짐

이는 자본주의 열강이 각기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며 경쟁을 벌이는 것을 당연시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선 대외적으로 ‘한번 해보자,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오바마 시절의 미국 제국주의는 너무 물러터졌다는 함축이기도 하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적인 기존 세계 질서를 미국에게 유리해지도록 흔들어 놓을 태세가 돼 있다는 뜻이다.

트럼프의 이런 호언장담들은 자신의 핵심 지지자들인 미국 서민층(중간 계급 하층과 일부 노동자층) 내의 국수주의자들과 이민 혐오자들의 사기를 북돋는 내용이었다.

물론 트럼프는 1년 전 대선 후보 시절에 그가 보였던 어느 정도 고립주의적인 경향을 이번 UN 총회 연설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는 대기업과 세계의 다른 지도자들을 의식한 것이었다. 이들에게 트럼프는 미국의 적들(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 등)에 맞서 계속 동맹 관계를 다지자고 호소했다.

이들에게 트럼프는 미국의 국권이 중요한 건 세계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는 미국의 국방예산안이 초당적 지지를 받아 의회에서 통과됐다고 자랑했다.



11월 동아시아로 오면서 트럼프가 동원한 항공모함

미국의 군비지출은 미국 다음가는 10개국의 군비지출을 전부 합친 것보다도 많다.

물론 중국은 트럼프가 미국을 지지하라고 호소한 자들에 포함되지 않는다.

트럼프가 가장 험악한 말을 퍼부은 국가가 바로 북한이었다. 며칠 전 한국 국회에서의 연설에서도 트럼프는 북한을 22분간 저주했다.

지난 몇 달간 긴장이 고조돼 온 지역도 바로 한반도 주변이다.

트럼프는 UN 연설에서 북한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고,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말은 북한 지도자들만 대상으로 삼지

않고 북한 주민 전체도 대상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이전 미국 대통령들의 위협과 결정적으로 다른 대목이다.

이후 트럼프의 각료들, 가령 니키 헤일리 UN 주재 미국대사, “미친 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말을 쏟아냈다.

물론 틸러슨은 3주 전쯤 트럼프를 “명청이”라고 불렀고, 또 “트럼프도 북한과의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금으로선 북한과 연계가 있는 은행들과 기업들, 개인들을 겨냥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내리고, 군사훈련의 수위를 대폭 높인 수준이다. 이는 일본과 한국 방문

중에도 트럼프가 확인한 사항이다.

그러나 트럼프가 대선에 성공한 비결이 미국 우선주의와 인종차별, 성차별, 색수열리테 차별 등 반동적 관념을 가진 미국 서민층의 반(反)대기업 정서를 결합시킨 것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반면 공화당 주류와 민주당이라는 전통적인 양당 체제는 대기업들의 지지를 받아 왔다.)

또한 트럼프의 부상으로 세계의 다른 곳에서도 우익이 사기가 오른 반면 개혁주의적 진보세력은 우울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세력균형은 트럼프가 동북아시아에서 점점 더 강수를 쓰도록 고무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북한은 미국의 동맹인 도교와 서울을 공격할 것이다.

IJSS, 즉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겨우 2~3주 안에 서울 주민 중 일백만 명의 사상자가 나올 것이라고 추산한다.

트럼프는 이란과의 핵협정을 인증하지 않겠다고 했다. 북한이 얻었을 메시지는 명약관화하다. 미국과의 영구 평화는 없다는 것이다.

사실 미국이 북한 핵을 문제 삼으며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중국과의 제국주의적 경쟁 때문이므로,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과의 영구 평화는 상정하지 않고 있을 것이다.

영구 평화가 불가능하다는 상황 인식이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으로

바뀌게 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보게 되면 행정부와 군부의 지도자들은 사고 방법을 바꾸기 시작한다. 전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언제 전쟁을 벌이는 게 가장 유리한 시점이냐가 계산법이 되는 것이다.

그때는 그동안 전쟁에 그리 의욕을 보이지 않았거나 승리를 낙관하지 않던 자들도 일전을 벌이기로 마음먹는 경향이 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두 달 전 이런 사실을 상기시켰다. “1962년 10월 미국과 소련은 쿠바 미사일 배치 문제로 거의 핵전쟁을 벌일 뻔했다. 훨씬 덜 알려져 있지만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1983년 10월 소련 지배자들은 미국이 군사 훈련을 빙자해 선제공격을 할까 봐 두려워하며, 자신들이 선수를 칠까 고려했다. 그 순간들은 심중팔구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을 것이다.”

미국과 중국,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공포의 세력균형”이 한반도에 “제한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없도록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재래식 전쟁의 가능성도 잊지 말아야 한다.

2퍼센트 미만에 불과한 확률도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의 손실과 곱한 기댓값은 엄청나다. 핵전쟁이든 재래식 전쟁이든 판돈이 한반도 주변에서는 너무 큰 것이다.

과로 OUT! 노동시간을 대폭 줄여야 한다

주 68시간 행정 해석 당장 폐기하라

박설

문재인은 “과로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계속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말과 달리 실제로는 시급한 최소한의 조처조차 망그적대고 있다.

특히 주당 노동시간을 최대 68시간까지 허용한 노동부의 행정 해석을 당장 폐기할 수 있는데도, 문재인은 한가하게 국회에 책임 떠넘기거나 하고 있다.

그것의 효과는 그저 한두 달 시행이 늦춰지는 게 아니다. 유감스럽게도 정부·여당의 노림수는 수년의 유예기간 두기(2019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적 시행), 유연근무제 확대하기, 정규직의 임금·노동조건 저하시키기 등에 있다. 민주당은 국회에 이런 방안들을 내놓으며 “기업 부담 최소화”를 약속했다.

이쯤 되면 자연스럽게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법에 명시된 주당 52시간 상한조차 2021년까지 미루겠다면, 도대체 “임기 내 연 1800 노동시간 실현” 약속은 어찌 되는 것인가?

한국의 장시간 노동은 세계적으로 악명 높다. 지난해 연간 총 노동시간은 2184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무려 420시간가량 길었다. 포괄임금제하에서 집계되지 않는 부모수 초과노동,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시도 때도 없이 강요되는 연장근무 등은 빠진 수치다.

노동자들에게 “저녁과 휴식이 있는 삶”은 판 세상 얘기다. 많은 이들이 만성 과로로 몸이 축나고 삶이 피폐해지는 것을 경험한다. 교대제 근무자들은 신체리듬이 깨져 일하지 않을 때도 쉽게 잠들지 못하는 악순환을 반복한다.

그 결과 정부 통계로도 매년 300여 명이 과로로 목숨을 잃는다. 이런 조건에서는 가족과 어울리고 문화·정치 활동을 하는 것도 쉽지 않다.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역대 정부들도 말로는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해 왔다. 일부 전문가들은 장시간 근무가 노동 생산성을 떨어뜨린다고 걱정하기도 한다.

그런데도 한국의 노동시간은 좀체 줄지 않았다. 오랫동안 더딘 감소 추세였다가 최근 몇 년 새 정체(혹은 약간의 증가세) 상태다. OECD 국가들의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한국의 장시간 노동은 비극적 죽음을 낳고 있다

연평균 노동시간이 2013년 이후 증가세로 돌아선 것을 보면 비단 한국만의 현상도 아니다.

사용자들이 노동시간을 연장해 착취율을 끌어올리는 방식에 여전히 의존하기 때문이다.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이윤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어서다.

예컨대 자동차 기업들은 주간연속 2교대제를 도입할 때 노동강도를 높였지만 생산량을 만회하기에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점심·휴게시간과 휴일을 줄이고 주말 특근을 유지하는 데 공을 들였다. 버스·화물차 운송사업주들도 차량 운행 속도, 적재화물 무게 등을 무한정 늘릴 수 없기에 초장시간 노동에 의존한다.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을 최대한 쥐어짜려고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야간·휴일근무, 교대제, 낮은 기본급의 기형적 임금구조, 포괄임금제 등 다양한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자본의 이해관계에 진지하게 도전할 의사가 없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려면 노동운동이 대중투쟁 건설에 확고히 주안점을 뒀야 하는 까닭이다.

노동자의 “선택권” 늘리는 유연근무제?

문재인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의 방법으로 유연근무제 확대를 말한다. 탄력근무제의 일종인 ‘노동시간 저축 휴가제’를 도입하고, “일·생활의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 관행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실제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노동시간 저축 휴가제는 초과근무를 적립해 뒀다가 일감이 줄 때 휴가로 대체·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사용자가 필요할 때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고 초과근무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피할 수 있다.

재계가 이 제도 도입을 환영하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유연근무제가 노동자들이 “원할 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영국, 독일, 미국 등의 유연근무제 경험을 봐도 노동시간 선택권은 노동자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있다.

반면 대다수 노동자들은 들쭉날쭉한 노동시간 때문에 일상을 계획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소득 감소로 불안정성이 더 커졌다.

사용자들이 유연성을 추구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필요에 노동자들을 종속시키려는 것이지, 노동자 개인(가정)의 편의를 봐주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일·생활(가정)의 균형”을 더 위태롭게 할 것이다.

특례업종 폐지하라

근로기준법 59조는 노동시간 규제를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드는 별도의 영역을 두고 있다. 우편, 운송, 보건, 교육서비스, 금융·보험 등 26개 업종은 연장근로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전체 사업장의 60퍼센트, 노동자의 48퍼센트가 여기에 해당한다.

근래 벌어진 비극적 죽음들은 그 피해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올해 들어 집배 노동자 15명이 과로사했다. 지난 7월 사상자 18명을 낸 고속버스 연쇄추돌사고는 하루 15~16시간씩 계속되는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졸음운전이 원인이었다.

임금·노동조건 저하가 없어야 한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 위원장 홍영표(민주당)는 휴일근무수당에 대한 중복 할증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복 할증을 주면 노동자들이 일을 더 하려 할 수 있다”면서 말이다.

그러나 뻔히 보이듯 그 속내는 따로 있다. 기업주들에게 인건비 부담을 덜어 주려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할증 수당에 욕심을 내 초과근무를 하게 된다는 식으로 엉뚱하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말이다. 이렇게 되면 사용자들은 저렴한 휴일근무를 더 쉽게 사용할 수

정부가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이런 죽음들을 방치해 온 것은 위험천만한 억지가 아닐 수 없다.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이 의료사고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한다(설문조사).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휴식과 쾌적한 노동조건을 보장해야만 안전하고 질 좋은 공공서비스도 가능해진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특례업종조차 폐지하지 못하겠다고 한다. 10개로 축소하겠다는데, 운수업, 보건업 등은 여전히 특례업종으로 남게 된다. 그러고도 “과로사 없는 사회”를 말할 수 있는가?



장시간 노동에 항의하는 노동자들

있다. 정말로 노동자들이 초과근무의 압박에서 벗어나려면 노동시간이 줄어도 임금 저하가 없어야 한다. 임금이 줄면 그것을 만회하려고 노동자들은 연장근무나 투잡으로 내몰릴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노동자들더러 ‘임금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지만, 가뜰이나 경제 위기로 생계가 파탄해지고 노후복지도 보잘것없는 상황에서 임금 삭감에 초연할 이는 거의 없을 것이다.

한편,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은 노동시간을 줄인 만큼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며 노동강도 강화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도입을 강조했다. 그러나 금융·보험업에서 흔히 그러하듯, 성과 경쟁은 연장근무를 조장하는 구실을 한다. 또 강도 높은 노동은 사고위험과 각종 질환을 낳아 긴 노동시간 못지 않게 삶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다.

따라서 노동시간 단축이 실제 효과를 내려면, 임금·노동조건 저하가 없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만약 노동강도 강화가 수반된다면, 노동시간이 줄어도 기존 인력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 돼 신규채용의 유인이 사라질 것이다. 임금이 줄어도 마찬가지로의 효과를 낸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제시하는 ‘일자리 나누기’는 일자리 창출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노동시간 단축에 임금 삭감과 고통분담을 전제하기 때문

이다. 그런데 노동운동의 일각에서는 노동시간 단축이 임금 삭감으로 귀결되는 것을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있다. 제한된 개선만이 가능하다는 관점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필연이 아니다. 투쟁 과정에서 계급 간 힘의 크기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무엇보다 오늘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노동계급에게 절

실한 요구다.

한쪽에서는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청년들이 단기 일자리나 실업으로 고통받는 현실은 매우 불합리하다.

노동운동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유연근무제, 임금·조건 후퇴 압박에 단호하게 반대하며, 노동부 행정 해석 즉각 폐기와 대폭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걸고 진지하게 투쟁을 건설해 나아가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임금’은

김하영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조직노동자운동팀장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 이것은 “자유롭고 공정한 교환”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노동자는 자신이 생산한 가치만큼 임금을 받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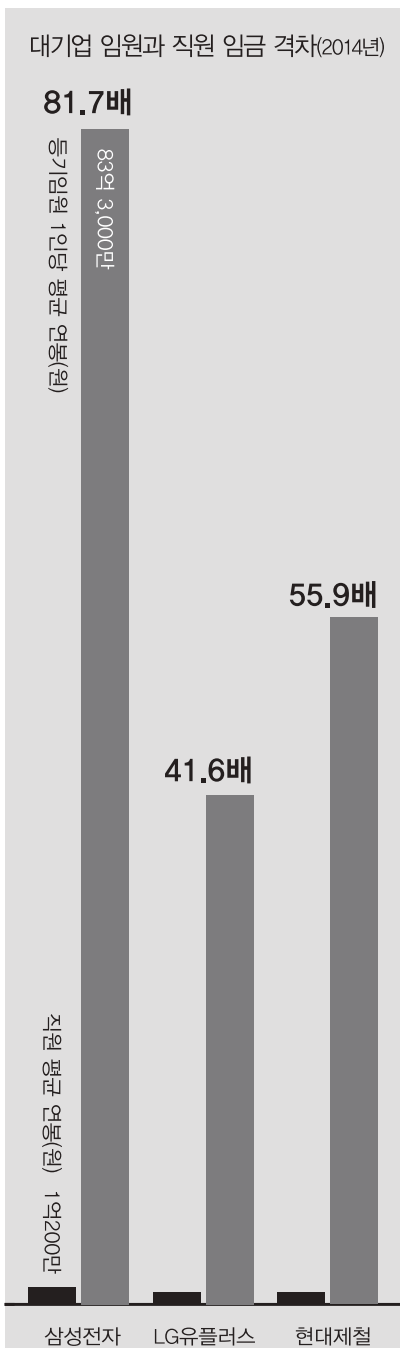
노동자가 생산한 가치는 임금보다 훨씬 크다. 사용자는 노동자가 생산한 가치의 일부만 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가져간다. 바로 이것이 착취다. 그리고 바로 착취가 자본가들이 얻는 이윤의 원천이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공정한 노동에 대한 공정한 임금’ 같은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한 것처럼 보이는 교환의 이면에 감춰진 착취를 밝혀 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극소수가 다수인 노동자들을 일 시켜서 엄청난 이윤을 벌어들인다. 극소수의 수중에 부가 집중되고 빈부 격차가 증대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흔히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조직해서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것 이상의 임금을 요구하는 탐욕을 부린다고 도리어 노동자들을 비난한다. 이런 ‘이기주의’가 경기회복을 가로막고, 임금 격차를 벌린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비단 기업인과 보수 정치인과 보수 언론만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과 심지어 진보진영의 많은 개혁주의자들도 이와 본질적으로 같은 주장을 한다.



‘공정임금’ 운운하며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에 나선 문재인 정부

대기업 노동자 임금이 ‘너무 많다’는 거짓말

문재인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한다. 일부는 너무 적게 받고 일부는 너무 많이 받는 불공정을 개선하겠다고 한다. 그들이 기업 CEO나 임원의 봉급과 노동자 임금 사이의 격차를 얘기하는 것일까? 실제로 둘 사이의 격차는 어마어마하다. 삼성전자 임원 봉급은 직원의 80배가 넘고, 현대제철은 50배, 엘지유플러스는 40배가 넘는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임금 불공정은 이것이 아니다. 그들은 CEO나 임원(자본가 계급이거나 상층 중간계급에 속한다)의 고액 연봉을 문제 삼지는 않는다. 오히려 ‘전문성’과 ‘책임성’이 큰 직무는 보상받을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다.

문재인 정부가 정조준하는 것은 대기업의 정규직과 근속연수가 많은 노동자들의 임금이다.

정부는 더 많은 보상을 받을 객관적 근거(직무 가치)도 없이 그저 규모가 큰 기업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임금을 더 많이 받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많은 개혁주의자들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마치 하청·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저임금에 기대어 대기업 CEO·임원들과 함께 잔치를 벌여 온 것처럼 주장한다. <한겨레>와 <경향>은 이런 주장을 열심히 전파한다.

그러나 최근 한 통계는 실제로는 대

기업 노동자들의 보상 수준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 줬다. OECD가 발행한 <한눈에 보는 기업가정신 2017>을 보면, 한국 대기업(제조업)은 부가 가치의 단지 28퍼센트만을 노동자들에게 임금으로 주고 있다.(7면 <그림 1>을 보시오.)

프랑스가 76퍼센트, 독일이 73퍼센트인 것에 비하면 이것은 매우 낮은 수치다. 한국은 32개국 중 30위다.

보상 수준이 OECD 꼴찌 수준(29위)이기는 한국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다.

일부 노동자들이 임금을 너무 적게 받고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옳은 말이지만, 그것이 다른 일부 노동자들(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이 너무 많이 받기

때문은 아니다.

저임금층이 늘고 빈곤이 증대하는 면에서 부를 늘려 온 것은 기업주, 기업 임원, 은행가, 고위 정치인들이다. 재산은 차치하고 임금소득만 보더라도 2000년대 초반 이후에는 오로지 상위 1퍼센트만이 소득 상승 가도를 달렸다.

이런 불평등을 개선하려면 저임금층의 임금을 대폭 올리고 그 재원을 기업과 부자들이 대도록 해야 한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불공정’하다고 문제 삼고 그들의 임금을 낮춰서 확립하려는 임금 ‘공정성’은 말만 번지르르 할 뿐 실제로는 진정한 불평등을 감추고 바닥을 향한 경쟁을 부추길 뿐이다.

직무급은 또 다른 방식의 임금 차등화를 합리화할 뿐

문재인은 11월 18일 일자리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임금체계를 직무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직무와 능력에 따라” 보상받고, “노력·성과·보상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공정임금”이라는 것이다.

직무급을 대안 임금체계로 제시한 것이 문재인 정부가 처음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가 내놓았던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에도 직무급이 포함됐었다.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문재인 정부가 직무급제에 진보 색채를 더 잘 하고 그것을 홍보해 줄 진보계 인사들이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같은 일(직무)을 하는 데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중소기업

에 다니는 이유로, 근속연수가 적다는 이유로 더 적은 임금을 받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며 차별받는 사람들 편인 것처럼 말한다. 직무급제가 노동운동이 오랫동안 요구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가장 가까운 임금체계가 아니냐고도 덧붙인다.

그러나 첫째, 이전 정부든 현 정부든 직무급제를 도입하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임금 억제다. 현 호봉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기 때문에 기업들의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그래서 직무 가치나 성과에 연동되지 않은 임금 인상에 제동을 걸려 한다.

직무 중심 임금체계 옹호자들은 초임 대비 30년 근속자의 임금이 유럽은 1.69배인 데 반해 한국은 3.78배나 된

다며, 동일 직무 내 임금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새 임금체계 아래서는 같은 직무에 20~30년 종사해도 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낮은 직무 등급에 속한 노동자라면 저임금에 고착될 수 있다. 또, 동일 직급 내 임금 격차는 줄어들지라도 직급 간 임금 격차는 더 커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공 성격이 강한 한국의 경우 하위 직급 노동자의 근속연수가 올라가면 상위 직급 평균임금 수준에 다다를 수 있는 반면, 직무급 전통이 강한 영국의 경우는 하위 직급 노동자의 임금 분포가 끝나는 지점에서 바로 위 직급 노동자의 임금 분포가 시작된다.(7면 <그림 2>를 보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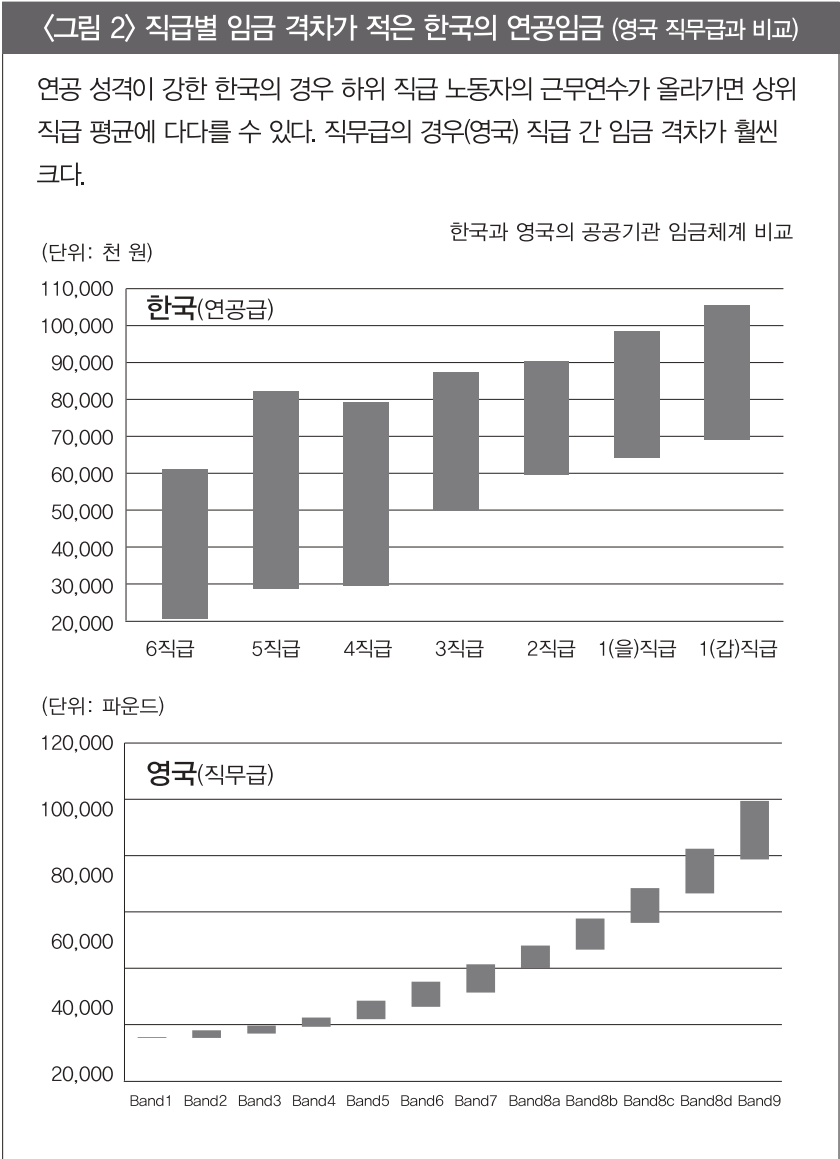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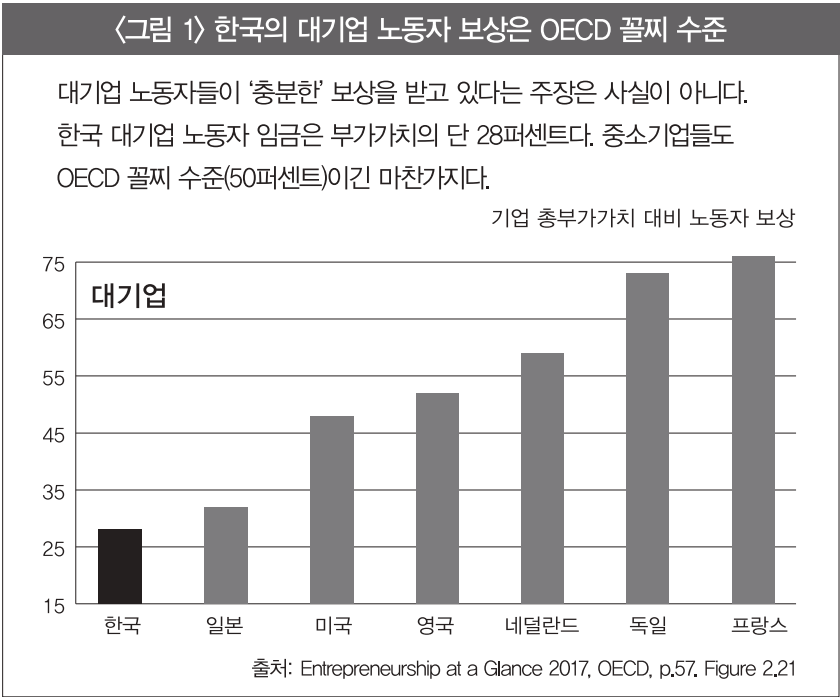
능력주의라는 신화

둘째, ‘직무와 능력’에 따라 “노력·성과”와 연계해 임금을 정하는 것은 공정하기는 커녕 또 다른 방식의 임금 차등화를 합리화하는 것일 뿐이다.

직무 중심 임금체계 옹호자들은 근속연수, 고용형태,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는 불공정하다면서, 직무 가치를 분석해 직무 등급에 따라 ‘공정’하게 임금 차등을 두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떤 직무의 가치가 높게 매겨질지는 뻔하다. CEO와 임원들이 부와 일자리를 창출해 사람들을 먹여 살린다는 ‘상식’에 따라 그들의 직무 가치가 최고로 인정될 것이다. 관리자와 고급 전문가들은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높은 직무

정말 공정한가?



정미영 작가

❶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다. 그들의 수억, 수십억 대 연봉과 스톡옵션은 정당한 것이 된다.

반면, 육체직과 단순 사무, 판매 등 많은 노동자들의 직무는 낮게 평가되기 십상일 것이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의 계획대로 직무를 “세분화”하고 “성과·보상 간 연계성을 강화”하면 직장 은 더 위계적이 되고 노동자 간 경쟁이 강화될 것이다.

문재인 식 ‘공정임금’은 모든 개인들이 능력과 노력에 따라 노동시장의 지위가 결정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

누군가 불공정 거래로 시장을 훼손하지만 않는다면(가령 대기업 지불능력에 기댄 대기업 노동자의 고임금), 이런 시스템에 따른 보상은 공정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능력주의는 신화일 뿐이다. 사람들의 성과는 그들이 책임

질 수 없는 요인들, 가령 부모의 재산과 소득, 유전적 재능, 시장의 변동, 제도 변화 등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가령 몇 년 전과 변함없는 능력을 가진 은행 노동자는 금융 위기로 하루 아침에 실업자가 될 수 있다. 어떤 시기의 취업준비생들은 수년 전 학생들과 다를 바 없는 실력을 가졌는데도 시장의 변동과 정부와 기업의 정책 때문에 비정규직이 되는 비율이 더 높을 수 있다.

그런데도 일단 직무 등급이 매겨지면 저임금과 그로 인한 빈곤은 그 개인의 탓이 된다. 직무와 능력에 따라 보상 받는다는 ‘공정임금’ 논리는 부의 대물림에 좌절하거나 절망한 청년들에게 한 줄기 빛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냉혹함과 무자비함이 작용하고 있다.

동일 임금은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가?

직무급이 된다고 해서 정말로 “직무와 능력에 따라” 보상받는 것도 아니다. 직무급이 정착된 유럽 나라들과 미국을 보면, 남녀 간, 인종 간 임금 차등이 유지되고 있다. 이것은 능력과 아무 관계없는 순전한 차별일 뿐이다.

가령 영국에서 흑인 대졸자 임금은 백인 대졸자보다 평균 24퍼센트 낮고, 런던의 남녀 임금 격차는 약 23퍼센트이다.

또, 직무급이 정착된 유럽 나라들과 미국에서 임금 격차와 소득 불평등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더 심화돼 왔다.

특히 미국의 경우, 바로 기업 고위임원·관리자와 일반 노동자 사이의 임금 격차가 소득 불평등의 주요 요인이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한국을 미국의 보상 모델을 추종하는 나라로 꼽았다(《Global Wage Report 2016/17》).

임금체계를 특정한 방식으로 바꾼다고 해서 임금 평등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는 사용자들의 차별에 반대하는 투쟁이다. 이것이 호봉제 하에서라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설사 직무급제가 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명시된다 해도 실질적인 동일임금은 투쟁 없이 쟁취하기 어렵다. 기업과 정부는 동일노동에 대한 협소한 정의, 차별적인 직무등급제 마련하기, 대기업·정규직·남성 노동자들에게 희생 전가하기 등으로 빠져나가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유럽에서도 남녀 동일임금에 한 걸음 다가간 것은 1968년부터 1970년대 초반 노동자 투쟁 상승 속에서였다. 당시 영국 등지에서 수많은 동일임금 파업이 벌어졌고, 남녀 노동자들이 성공적으로 연대한 경우 큰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동일임금법 효력이 발효된 1975년 이후로는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동일임금 판단을 (투쟁 대신) 노사분규 재판소에 맡기면서 노동자들은 성과를 보지 못했다. 아래로부터의 대중 행동이라는 진정한 강제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임금 삭감 없는 동일임금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은 중소기업·비정규직·여성 노동자들이 적정 임금을 받으려면 특히 대기업·정규직·남성 노동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공정성을 들먹이며 대기업·정규직노동자들의 임금을 공격하는 것이 마치 진보의 가치인 듯한 인상마저 풍긴다.

그러나 동일임금의 목표는 중소기업·비정규직·여성 노동자의 임금을 대기업·정규직·남성 노동자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지, ‘동일’할 그 자체가 아니다. 사용자들이 차별을 통해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는 이

유를 생각해 봐도 이 점은 명백하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동일임금을 지지하면서도, 동시에 상대적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기 위해 상대적 고임금 노동자들을 희생시키는 방식을 일관되게 반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와 기업들은 동일임금을 위한 재원을 늘리지 않은 채 노동자 전체의 임금 수준을 하향 평준화하려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1997년 영국 공공기관에서 ‘단일 직위(single status)’ 협약을 맺은 이후 벌어진 일이다.

정규직 노동자인 남편의 임금을 낮춰 비정규직 노동자인 아내의 임금이 조금 오르는 것은 조삼모사일 뿐, 노동계급의 삶을 개선하지 못한다. 원청 노동자인 아버지의 임금을 삭감해 하청 노동자인 아들의 임금을 조금 인상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임금 삭감 없는 동일임금이 필요한 이유다.



추 · 천 · 도 ·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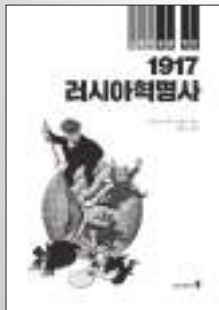
오늘날 한국의 노동계급
김하영 지음 | 456쪽 | 16,000원 | 책갈피

노동계급이 파편화·이질화돼 약화됐다는 주장이 유행이다. 이 책은 고전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한국 노동계급을 진단하고 노동계급 약화론을 논박한다. 특히 그것이 투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해, 노동운동의 진로를 고민하는 투사들에게 유익할 것이다.



제국주의론으로 본 트럼프 등장 이후의 동아시아와 한반도
김영익, 김하영 외 지음 | 288쪽 | 13,000원 | 책갈피

“미국 우선”을 표방한 트럼프의 등장이 한반도와 동아시아 일대에 가져올 불안정을 마르크스주의의 제국주의론으로 분석한 책. 북핵, 일본의 군사대국화, 문재인 정부의 외교 국방 정책에 대한 일관된 관점을 제시한다.



노동자들을 위한 1917 러시아혁명사
〈노동자 연대〉편집부 엮음 | 104쪽 | 4,000원 | 노동자연대

러시아혁명은 20세기 유일하게 노동자들이 권력을 차지하고 사회주의로 나아간 혁명이었다. 사전 지식 없이도 1917년의 핵심적 사건들과 논쟁들을 이해할 수 있고, 3~4분이면 읽을 수 있는 짧은 글들로 나누어 있어 출퇴근 길에 읽기에도 딱이다.



빼앗이들을 위한 여성해방 가이드: 여성차별과 자본주의
추디스 오아 지음 | 91쪽 | 3,000원 | 노동자연대

여성차별은 영원 불변한가? 남성이 여성차별의 원인 제공자인가? 마르크스주의는 여성차별을 설명할 수 있을까? 여성해방은 어떻게 가능한가? 여성차별을 둘러싼 주요 토론거리를 짧고 쉽고 흥미롭게 설명한 책.

노동조합과 ‘사회적 대화’

노동조합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파트너가

김하영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조직노동자운동팀장

“문재인 시대에는 노동조합운동이 달라져야 한다”는 주문이 많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가 “노동 존중”을 약속한 만큼 이제 노동조합도 새로운 환경에 맞는 전략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개혁주의자들의 주문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문재인 정부의 “파트너(동반자)”가 되라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더는 “반대 투쟁에만 급급”해선 안 되고, 정부와 협력해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고 한다.

가령 이병훈 교수는 노동조합이 “노동정책 구제와 과정을 돕”는 “정부의 주요 파트너가 될 것”을 제안한다. 우로로부터 “정부를 엄호”하고 노동 쪽으로 “견인”하라는 것이다.

민주노총이 주최한 ‘1987년 노동자 대투쟁 3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도 유사한 제안이 나왔다. 김공회 교수는 노동조합이 “국가기구 안의 공적 의사 결정 과정”에 안정적으로 참여하는 “노동운동의 제도화”를 더 깊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정책 개입력 강화”를 추진한 것이 한두 해 된 일은 아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하에서야말로 노조가 진짜 ‘국정 파트너’로 대접받을 수 있게 됐다고 개혁주의자들은 기대한다.

노동조합 지도자 상당수와 개혁주의자들은 이를 통해 빈곤과 양극화 등 신자유주의가 낳은 폐해를 완화하고 노동조합의 사회적 위상도 대폭 강화할 수 있다고 여긴다.

노동조합이 양보하면 사회적 위상이 높아질까?

상당수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양보 요구에 환담할 태세인 듯하다. 그들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양보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을 보태겠다고 한다.

공공노조 지도부는 1600억 원 성과연봉제 인센티브를 반납했고, 금속노조 지도부도 일자리연대기금 2500억 원 출연을 제안했다. 보건의료노조 지도부는 인력확충과 정규직화를 위해 임금을 억제하겠다고 했다.

온건파들은 이런 선도적인 양보 전략으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면 ‘대기업 노조 이기주의’라는 낙인찍기와 ‘고립’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노동자들 사이의 격차를 줄여 계급 동일감을 회복하고, 노동조합이 (낮은 조직률을 넘어) 사회적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를 추구해 온 서구의 많은 나라 노동조합들이 지난 30여 년 동안 조직 규모가 점점 축소되고 위상이 전만 못했던 것만 봐도 이런 장밋빛 전망은 미미지 못하다.



7월 28일 재벌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대한 문재인. 이 역거은 파티에 노동조합이 들러리가 대선 안 된다

‘사회적 대화’는 노동자 양보를 얻어 내기 위한 것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노동계와 정부 사이에 국정 파트너로서의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강조하는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노동조합의 양보를 얻어내는 것이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문재인은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는” 사회적 대화 협을 강조한다. 한국이 “도약할 미래”가 이것에 달려 있다면서 말이다.

처음으로 노동조합을 “동반자(파트너)”라고 부른 김대중도 IMF 경제 위기 극복이 사회적 대화협에 달렸으며 노동

계의 양보(특히 정리해고와 파견 법제 약)를 요구했었다.

당시 사회적 대화협 옹호자들은 ‘사회협약’을 통해 재벌개혁, 노동기본권 보장, 복지 확충을 얻을 수 있었다며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양보를 정당화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시간의 검증을 견디지 못했다. 그 뒤 재벌들은 더 부유해졌고, 비정규직과 빈곤층이 늘었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아진 것도 아니다.

‘사회협약’ 변호자들은 당시는 신자유주의 광풍이 몰아치는 시절이었으므로 김대중 정부도 그로부터 자유롭지 못했

다고 변명한다. 김대중 정부가 ‘사회협약’을 지키지 못한 것은 기반이 약해 우파의 공격에 취약했기 때문이라고도 뱉는다.

그러나 그런 결과는 ‘사회적 대화협’의 예외적 사례가 아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이뤄진 사회적 대화협은 거의 다 그런 결과를 낳았다. 그것은 자국 자본주의를 효율화하기 위해 노·사·정이 협력해야 한다는 사회적 파트너십 정신의 자연스런 귀결이다. 특히 경제 상황이 나쁠 때 노동자들에게 더한층의 양보가 강요되기 마련이다.

문재인 정부가 네덜란드의 사회적 대

타협을 모델로 제시하는 것을 보면, 저성장이 “노멸”(정상적)이 된 시대의 문파의 공격에 취약했기 때문이라고도 뱉는다. 그러나 그런 결과는 ‘사회적 대화협’의 예외적 사례가 아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이뤄진 사회적 대화협은 거의 다 그런 결과를 낳았다. 그것은 자국 자본주의를 효율화하기 위해 노·사·정이 협력해야 한다는 사회적 파트너십 정신의 자연스런 귀결이다. 특히 경제 상황이 나쁠 때 노동자들에게 더한층의 양보가 강요되기 마련이다.

문재인 정부가 네덜란드의 사회적 대타협을 모델로 제시하는 것을 보면, 저성장이 “노멸”(정상적)이 된 시대의 문파의 공격에 취약했기 때문이라고도 뱉는다. 그러나 그런 결과는 ‘사회적 대화협’의 예외적 사례가 아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이뤄진 사회적 대화협은 거의 다 그런 결과를 낳았다. 그것은 자국 자본주의를 효율화하기 위해 노·사·정이 협력해야 한다는 사회적 파트너십 정신의 자연스런 귀결이다. 특히 경제 상황이 나쁠 때 노동자들에게 더한층의 양보가 강요되기 마련이다.

노조의 양보는 노동자 원자화를 부추길 뿐

사회적 파트너십은 조합원들이 상충논의를 쳐다보며 수용화되도록 만들고, 노사·노정 간 계급 협조주의를 부추겨 노동자 투쟁을 억제한다. 가장 잘 조직된 부문이 양보를 강요받으면서도 저항하지 못하면, 나머지 노동자들이 그렇게 하기는 더 어렵다. ILO(국제노동기구)가 지적했듯이, 정규직의 ‘과보호’가 공격받은 곳에서는 한결같이 비정규직의 처지도 더 어려워졌다.

사회적 합의의 결과가 노동자 전체의 처지를 악화시키는 것인 한, 합의에 참가한 노동조합의 사회적 위상이 높아지는 어려울 것이다. 그것이 기성체제의 가치관이라는 면에서 덕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오히려 평범한 노동자들은 사용자나 기성 정치인들과 자연스럽게 마주 앉게 된 노동조합 지도자들을 의심의 눈으로 쳐다볼 것이다.

노동조합의 위상이 진정으로 강화되는 때는 노동자들이 아래로부터의 대중 행동을 통해 강력한 힘을 보여 주는

때다. 그런 때 미조직을 포함해 더 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뭉쳐 노동조건을 개선시킬 기대하게 된다. 노동조합이 이런 희망을 보여 주지 못하면 노동자들은 개인적 자구책에 기대게 된다. 우리는 모두 시장에서 경쟁하는 원자화된 개인들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제한된 파이를 놓고 동료와

의 경쟁에 나서게 된다. 선도적 양보와 사회적 대화가 계급 동일감을 회복하고 연대를 강화하는 길이 결코 될 수 없는 이유다.

우선, 공공부문 노조 지도자들이 1600억 원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정부는 공공연대기금 구성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가 아니다. 공공연대기금의 재원 중 구체적인 명시된 것은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반납할 인센티브 1600억 원뿐이다. 그 외에는 “공공기관 노동자 및 사용자들의 자발적 출연과 참여”로 돼 있다. 사측은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인 것이

다. 게다가 정부 인사는 공공연대기금 재

돼야 하는가?



문재인의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은 벌써 누락기가 되고 있다.

공공연대기금이 정부의 양보를 이끌어 낼 마중물이 될까?

이정원

11월 7일 ‘제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이하 공공연대기금) 발기인 대회가 열렸다. 공공연대기금은 지난 6월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와 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가 참여, 이하 양대노총 공대위)의 제안에서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기로 하자, 양대노총 공대위는 박근혜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 인센티브로 노동자들에게 지급한 1600억 원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1600억 원을 기본 출연금으로 해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일자리 창출 등 사회공공성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연대기금을 구성하자며 정부의 동참을 적극 제안했다.

양대노총 공대위 지도자들이 공공연대기금을 제안한 것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일자리 창출에 노동조합도 적극 나서자는 좋은 취지였을 것이다. 그러나 선한 의도가 언제나 좋은 효과·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문제인의 방면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상징이 된 인천공항에서는 사측의 보잘것없는 안예 노동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 과정에서 수개월 동안 노동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면서도 노조 측의 핵심 요구는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둘째, 연대기금은 의도와 달리 정규직 책임론을 강화해 연대를 구축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도 있다. 가령 이 기금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

단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결국 이사회는 양대노총 공대위 5인, 공공기관 사용자 4인, ‘공익 대표’ 6인으로 확정됐다.

이처럼 정부가 진지하게 돈을 낼 생각이 없다 보니,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을 성취할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 때문인지 공공연대기금이 제시한 사업 계획은 장학 사업, 공부방 지원, 공공기관 직장 체험 연수 등의 수준에 그쳤다.

노사정 협력 추구

이런 한계 때문에 양대노총 공대위 지도자들은 공공연대기금을 마중물로 삼아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과 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화와 노정 교섭’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와는 다른 ‘개혁’ 정부이므로 이런 구상이 실현될 절호의 기회라고 본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대표적인 개혁조치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적지 않은 노동자들이 실망하고 있는 지금, 노정 협력으로 정부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위험하다.

예를 들어, 문제인의 방면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상징이 된 인천공항에서는 사측의 보잘것없는 안예 노동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 과정에서 수개월 동안 노동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면서도 노조 측의 핵심 요구는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둘째, 연대기금은 의도와 달리 정규직 책임론을 강화해 연대를 구축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도 있다.

노동자들에게 추가적인 기금 출연 요구가 뒤따르다면 불만이 커질 수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정규직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것이 그리 반가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상황은 연대보다 반목을 키우기 십상이다. 정부는 이 틈을 비집고 이간질과 양보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손잡고 정부와 사용자들 압박하며 투쟁하는 속에서 자신감과 연대 의식을 높이는 것이다.

양보 압박

셋째, 노사정 협력 추구가 정부와 사용자들의 미온적인 태도와 문제점을 가려 주는 효과를 낼 위험도 있다.

공공연대기금에 관여하는 노조 지도자들이 지할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공공운수노조 소속인 서울지하철노조 조합원)의 농성에 대해 보인 태도는 이런 문제를 얼핏 드러냈다. 온전한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서울교통공사에 항의하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침묵했던 것이다.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태호가 공공연대기금 이사로 선임된 데다 노조와 협치를 강조해 온 서울시 노동정책을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이 벌어지는 것이 부담스러웠던 듯하다. 그러나 연대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외면한다면 기금은 도대체 무슨 소용이나는 재물을 뜯게 될 수 있다.

공공연대기금과 같은 노사정 협력 추구가 정부의 양보를 강제하는 데 필요한 노동자 투쟁을 약화시킬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의 일자리-임금 연동 교섭, 무엇을 보여 줬는가?

장호중

보건의료노조는 10월 24일 “2017년 초기업 산별교섭 및 노사정 협의”를 통한 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성과보고·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교섭 결과 10월 20일 현재 인력 확충 2227명, 비정규직 1만 999명 정규직화에 합의했다.(보건의료노조 산하 공공병원 74곳, 민간병원 21곳)

이후로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위원장은 “이번 합의가 산별교섭과 노사정 대타협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 의의를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대통령 선거 직후인 5월 17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적정 인력 확보,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교섭을 연동”하는 교섭 방침을 확정하 바 있다.

병원 노동자들은 인력 부족이 노동조건 악화의 핵심 원인이라고 본다. 인력 부족이 만성화돼 노동조건이 계속 악화되고, 이 때문에 퇴직(이직)이 빈번해져 인력 부족이 해소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병상 수는 급격히 늘었지만 인력은 그만큼 늘지 않아, 노동조건만 아니라 의사서비스의 질도 악화됐다. 메르스 사태는 이런 의료 현실을 비극적으로 보여 줬다.

너무 부족한 인력 확충, 지겨워질지도 미지수

그런데 이번 합의의 결과는 보건의료노조 집행부가 내놓은 인력 확충 목표에 비해 봐도 너무 부족하다. 보호자 없는 병원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면 시행하는 데에만 최소 11만 5570명이 필요하다.

이번 합의가 제대로 이행될지도 불확실하다. 이번 합의 대부분이 공공의료기관에서 실행돼야 하는데(인력확충 2227명 중 1991명, 정규직화 1만 999명 중 1만 97명), 필요한 재정이 확보될지 불투명하다. 현재 시행되는 공

공기관 ‘총액인건비제도’ 때문에 “기재정부에서 [재원 확보]의 키를 쥐고 있는 상태”(보건의료노조 보훈병원지부 소식지 24호). 정부가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에는 이를 위한 예산이 전혀 책정돼 있지 않다.

최악의 경우 정부는 필요 재원의 대부분을 자체 해결하라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공공의료기관 사측은 합의 이행을 명분으로 임금 양보를 추가로 요구할 수도 있다.

인력 확충에 필요한 재정의 일부는 ‘간호등급제 상향’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간호 인력을 늘리면 병원의 간호등급이 상향돼 일부 재정을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합의도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보훈병원 사측은 간호등급제 상향을 “노력한다”는 수준에서 합의했고, 전남대병원원은 “2019년 상반기까지” 단계적

으로 높이는 것으로 말쑥이 미뒀 됐다. 정규직화의 경우, 합의의 근거가 되는 정부의 ‘공공병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 가이드라인’은 일부 비정규직

을 정규직화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관련기사 : “신규채용, 별도 직급, 추후 논의” 공공병원 비정규직 ‘제대로’ 정규직화하라). 전남대병원에서는 기간제를 ‘가이드라인’에 따라 세부 합의 하겠다고 나중에 미뤘고, 간접고용은 “불가피한 경우 [계약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못박았다. 그 수는 전체 노동자의 23퍼센트에 이른다.

민간병원 21곳에서는 인력 확충 236명, 정규직화 902명이 전부다. 이조차 공공병원과 마찬가지로 불안정하다. 대개 간호등급 상향을 위해 “노력한다”거나 “2020년까지 전체 비정규직 비율을 10퍼센트로 제한한다”는 수준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2014년 기준 1000명 이상 민간 병원의 비정규직 비율은 25.5퍼센트)

몇 년째 제자리걸음인 임금

보건의료노조 집행부는 일자리 대화 협을 위해 임금 양보를 제안했다. 그러나 임금 양보는 조합원들의 바램과는 크게 다른 것이었을 뿐 아니라 그다지 효과도 없었다.

본지가 보도해 온 것처럼 병원 노동자들에게 임금은 인력 부족 못지않은 불만 사항이다.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병원 노동자들의 임금은 제자리걸음을 해 왔다. 노동조합의 목표 중에서 임금 인상(52퍼센트)이 가장 중요하다는 조합원 의견이 인력 확충(22.9퍼센트)보다 더 많기도 했다.(2015년)

2007년에 보건의료노조 지도부가 임금 인상분의 일부(3분의 1)를 정규직 전환 기금으로 내놓기로 했을 때 찬반투표에서 91퍼센트의 지지를 얻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올해에는 “정규직 임금을 떨어뜨려라도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 개선을 해야 한다”는 노동조합 활동 방향에 응답자의 46.4퍼센트가 반대했다.

이번 산별합의에서도 보건의료노조 집행부가 강조했던 것과 달리,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임금 양보가 없었다. 가장 많이 양보한 곳이 전체 임금 인상분의 10퍼센트 인만 수준에 그쳤다. 기존의 임금 불만이 압박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향후 정규직화를 위해 “임금 인상 자체”를 약속한 것은 앞으로 협상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사측은 올해 연말까지 계속될 세부 합의에서 이 약속을 추가 양보를 요구할 지 랫대로 삼으려 할 수 있다.

이번 부당한 압력과 이간질에 맞서고, 불안정한 합의라도 몇 가지 개선책을 실질적으로 이행되게 하려면 이를 뒤흔칠만한 투쟁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조정기간 만료를 앞둔 시점에서 보건의료노조 지도부가 매년 하던 집중집회조차 열지 않은 것은 아쉽다. 파업에 돌입할 때세를 거의 보여 주지 않았으니 사측이 실질적인 압력을 별로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지부별 파업연차제 집회에는 이례적으로 많은 조합원들이 참가해 투쟁 잠재력을 보여 줬다. 실질적인 투쟁을 조직한다면, 인력과 임금 둘 다 개선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

장호중

장호중

장호중

네덜란드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네덜란드 노사정 대타협은 어떻게 노동운동을 약화시켰나?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며 네덜란드의 노사정 대타협을 모델로 제시한다. 그러나 네덜란드 사회주의자 로프 게렛센은 네덜란드에서 노사정 합의가 고용 불안정, 임금 억제, 불평등 심화를 가져왔으며, 노동자들의 투쟁을 고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로프 게렛센**(사진)은 네덜란드의 월간 《사회주의자》 기자다. [] 안의 내용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노동자 연대> 편집부가 추가한 것이다.



네덜란드 노동조합 운동은 1970년대의 위상·전통과 비교해 봤을 때, 지난 수십 년간 상당히 약화됐다.

다른 나라들의 노동조합 운동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네덜란드 노동조합 운동에는 ‘폴더 모델’로 알려진 고유한 전통이 있다. 폴더 모델은 일종의 실용주의로, 협력을 위해 [계급 간] 차이를 제쳐 놓는 것이다. 독일 총리였던 헬무트 콜이 이 ‘모델’의 열렬한 팬이었다.

1980년대 이래 네덜란드 노동조합 운동의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 하나는 1982년 11월 악명 높은 ‘바세나르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경제 위기가 닥치고 실업이 늘던 시기였다. 당시 루트 뢰버르스 총리가 이끄는 우파 정부는 새로운 임금 [억제] 정책 등 여러 수단으로 노동계를 위협했다.

그 뒤 수십 년 동안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도입됐다. 바세나르 협약은 그 신포탄이었다. 실업이 늘고, 많은 영역에서 규제가 없어지고, 공공기관과 공공서비스가 민영화됐다. 일자리는 더 불안정해졌고, 사회보장제도와 임금·노동자 관련 법이 공격받았다. 그 결과,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이 계속 커졌다. 아동 수십만 명이 가난하게 자랐다.

투쟁 전통이 약화되다

바세나르 협약은 ‘콕-판 베인 협약’으로도 알려져 있다. 판 베인은 가장 큰 기업이 단체의 회장였고, 빔 콕은 가장 큰 노총인 네덜란드노총(FNV)의 위원장이었다. 네덜란드노총은 1982년 초 사회민주주의 노조와 가톨릭 노조가 합병해 설립됐다.(개신교 노조는 이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1990년대에 사회민주주의 정당[노동당] 대표가 된 빔 콕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집행하는 데 앞장섰다. 이는 노동당과 노동조합 운동, 그리고 사회 전체의 이데올로기적 변화를 뜻했다. 시장 논리가 맹위를 떨친 반면 사회적 영역은 공격받았다.

이는 오랫동안 노동조합 관료층과 사회민주주의가 서로 긴밀한 관계 속에서 발전하고, 기업과 노동조합과 그 밖의 여러 부문 사이에서 “사회적 합의”가 제도화한 결과였다. 이런 과정은 이른바 “사회적 파트너들”과 정부 간 대화와 합의라는 이름으로 미화됐다.

그 결과 파업이 크게 줄고 노동‘손실’ 일수도 줄어들었다. 이는 네덜란드 노동계급의 [투쟁] 경험이 적어지고, 전투성과 응집력도 약해졌음을 뜻했다.

바세나르 협약을 정당화하며 “더 많은 이윤은 더 많은 일자리다”(독일 총리 헬무트 슈미트도 비슷한 말을 했다)라거나, “더 낮은 임금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거나 적어도 실업률을 낮춘다” 따위의 거짓말이 널리 동원됐다.

바세나르 협약으로 기업가들은 물가수당[임단협 당시 예상한 물가인상률보다 물가가 더 오를 경우 사측이 자동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폐지하는 등 임금을 낮추고, 임금에 차등을 두고, 주주배당금을 임금 인상률과 분리시켰다. 일자리도 더 불안정해졌다.

노동조건 악화와 노동자 지위 하락

네덜란드 안팎의 경제·정치·사회적 변화도 노동조합 운동의 약화에 영향을 끼쳤다. 오늘날 노동조합 운동이 처한 환경과 그 내부 상황은 20~30년 전과는 많이 다르다. 유럽연합 통합의 진척과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이 기간 동안 일어난 대표적 변화다.

고용 시장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여성 노동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중요한 변화의 하나다. 비록 많은 여성이 대체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적게 벌지만 말이다. 따라서 노동조합 운동(특히 능동적이고 전투적인 구성원들)은 여성들의 이해관계, 기회와 바람, 경험에 부합하는 새로운 전략과 전술, 요구와 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최근에는 돌봄 노동자(보육시설·병원)와 청소 노동자들의 행동이



노사정 합의가 강요해 온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맞서 최근 대규모 파업에 나선 네덜란드 초등학교사들

있었다. 또한 이주민 출신 노동자 숫자도 늘고 있다. 여성차별과 인종차별에 맞서는 것이 노동조합 투쟁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고용 시장의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정규직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줄고 임시직이나 불안정한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다. 임시직, 유연 노동, ‘0시간 계약’[호출 노동], 피고용인 없는 수많은 ‘개인사업자’(ZZP-er)[특수고용노동자]가 그런 사례다. 네덜란드 노동자의 20퍼센트가량이 유연 근로계약을 맺고 있고, 12퍼센트 이상이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둘 다 유럽연합 평균보다 훨씬 높다.

이런 변화 때문에 노동자들의 지위가 약해졌다. 또한 새로운 방식으로 투쟁하고 조직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 그러나 이런 노동자들이 조직돼 행동에 나서는 것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는 점이 네덜란드에서 확인됐다.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청소·보건·슈퍼마켓 노동자들이 행동에 나섰다.

이런 행동들은 노동조합 운동의 고령화를 막고, 청년들이 노동조합 운동과 작업장에서 열정적이고 능동적으로 활동하게 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새로운 노동자들이 행동에 나섰지만, 노동조합은 이런 투쟁들을 반영해 기존의 고착화된 형태와 틀을 바꾸려는 구조적인 노력을 등한시켰다. 낮아진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고, 노동조합의 정당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으려면 바로 그런 시도와 노력이 필요하다.

패배의 경험

파업 전통이 매우 약하다는 것과 ‘폴더 모델’이 제도화돼 있어 노조 관료의 개혁주의에 대한 견제가 약하다는 것은 네덜란드 노동조합 운동의 여전한 약점이다. 불행히도 아직까지는, 민주적이고 전투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위해 싸우는 조직 좌파 세력이 단단하다고 말할 수 없다.

2007~2008년 금융·경제 위기 이후 [노동조건] 악화가 계속되면서 심지어 중앙은행장과 재무부 장관조차 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말할 지경이 된 것이 네덜란드의 현실을 잘 보여 준다.

최근 네덜란드 노동자들(그리고 노동조합 운동)은 은퇴 연령 연장이라는 또 한 번의 패배를 겪었다. 2004년에 35만 명 이상이 이에 반대해 파업했다. 네덜란드 역사상 가장 커다란 하루 파업이었다.

그러나 현장조합원들의 이런 투지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관료들은 투쟁을 전진시키길 거부했다. 현장조합원들의 영향력은 그런 관료들을 투쟁으로 등 떠밀 만큼 강력하지는 못했다. 관료들은 이 투쟁을 배신했고 연금 지급 연령이 늦춰졌다.

노동조합 운동은 퇴직 연령 인하 요구와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요구(아주 오랜 요구)를 결합시키고 이를 투쟁의 초점으로 삼아야 한다. 엄청난

1982년 ‘바세나르 협약’ 체결 이후 실업이 늘고, 많은 영역에서 규제가 없어지고, 공공기관과 공공서비스가 민영화됐다. 일자리는 더 불안정해졌고, 사회보장제도와 임금·노동자 관련 법이 공격받았다.

자산을 보유한 네덜란드 퇴직기금을 민영화할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

세금 체계의 변화도 신자유주의 정치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불평등이 상당히 커졌고, 네덜란드는 여전히 조세 회피처 국가다. 지난 수십 년간 소득세의 최상위 구간 세율은 72퍼센트에서 52퍼센트로 떨어졌다. 파트너십(합명·합자회사) 과세율은 34.5퍼센트에서 25.5퍼센트로 내렸다. 반면, 부가가치세율이 21퍼센트에 이를 정도로 높아져 평범한 사람들은 생활비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다.

가능성을 보여 준 최근 초등학교사 파업

폴더 모델의 영향이 강하다고 해서 노동조합 투쟁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최근 매우 반갑게도 초등학교 교사들이 대거 행동에 돌입했다. SNS를 이용해서 순식간에 4만 명이 참가한 행동위원회가 결성됐다.

주요 노조 바깥에서 시작된 이 행동에 노조들도 합류했다. 그러지 않았다면 조합원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까 두려웠던 것이다. 이 교사들은 노조와 함께 대규모 파업을 준비했다.

정부는 매우 두려워하며 파업을 막으려고 예산 확대를 약속했다. 그러나 초등학교사들은 임금을 다른 교사들 수준으로 올리고 행정 업무를 줄이려면 예산 확대 폭을 그 두 배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며 파업을 강행했다.

약 9만 명(참가율 95퍼센트)이 참가한 이번 초등학교사 파업은 1980년대 이래 처음이다. 파업 직후 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조합원 과반(63퍼센트)이 노조가 더 많은 행동을 조직해야 한다고 답했다. 투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

지금까지 살펴 봤듯이 고용주와 노조 사이의 사회적 합의 모델은 실패로 끝났다. 노동조합 운동은 약화됐고 여전히 노조 관료의 강한 영향력 아래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 운동은 이제 [3월 선거로 더한층 우경화한] 새 우파 정부, 끝이 안 보이는 자본주의의 위기와 대면하고 있다.

번역 김동욱

정규직·비정규직 연대와 투사들의 과제

박설

올 한 해 노동운동 전반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에 관한 문제가 날카롭게 제기됐다. 주요 노조들에서 잇따라 비정규직 동료들을 내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금속노조 지도부가 판매연대의 노조 가입을 거부한 것, 기아차지부 집행부가 비정규직을 노조에서 쫓아낸 것, 전교조 중집이 비정규직 교·강사의 정규직화 요구를 반대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저마다 '사정'은 있었다. 사측이 강요하는 판매 실적 경쟁의 우려(판매연대)나 가르치는 교사의 '자격' 요건(비정규직 교·강사) 논란이 그런 것이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은 내가 속한 부문·작업장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와 기업주들은 단결과 투쟁을 가로막으려고 온갖 방법으로 노동자들을 이간질하고 분열을 부추긴다.

노조 지도자들이 그런 '사정'에 타협한 결과는 부정적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정규직의 사기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낳았다. 든든한 정규직 노조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 자기 노조가 비정규직을 배신한 '이기주의'라고 여론의 못매를 맞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자신감을 갖기 어렵다.

이런 상황은 노동조합 투사들을 갇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기간제 교사들 좌파가 다양한 차별 이데올로기에 맞서며 기층에서 연대를 구축해야 한다

은 고민에 빠뜨렸다. 어떻게 노동자들의 연대를 발전시킬 것인가?

진지한 투사들이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생각은 정규직 노동자들을 싸잡아 비난하는 것이다. '이제 그들은 안 돼.'

그러나 이런 태도는 좌절감을 줄 뿐

이다. 또, 의도치 않게 연대 파기를 이끈 노조 지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효과를 낸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에도 맞지 않다. 올해 문제가 불거졌던 곳들에서도 비정규직에 연대하고자 했던 정규직

노동자들은 적지 않았다.

오히려 좌파들이 복기하고 돌아볼 점은 따로 있다. 노동조합 내 좌파들이 좀 더 일찌감치 기층에서 분열 이데올로기에 맞서 싸우고 연대를 구축했다면 사태는 달라질 수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일부 좌파들은 우왕좌왕 하며 시간을 까먹거나 노동조합 내 온건한 부위에 타협하며 문제의 일부가 됐다. 조합원들이 대거 이탈하거나 노동조합이 분열하게 될까 봐 우려했던 것이다.

그러나 좌파들이 비정규직 노조 분리나 비정규직 교·강사 정규직화 반대처럼 조합원들을 분열시키는 주장에 대해 논쟁을 삼가지 않을 때만 오히려 단결을 유지할 수 있다. 단결은 그저 여러 이견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좌파가 현실의 여러 압력에 타협하지 않고 단호하게 논쟁하고 설득할 때 강화된다.

무엇보다 좌파는 투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노동자들은 투쟁 속에서 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할 때, 체제의 희생자(비정규직, 이주노동자 등)를 비난하는 보수적 주장을 물리칠 수 있다.

경제 위기는 노동계급의 삶에 고통을 가해 노동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반목하게 만들기 쉽다. 그러나 위기가 계급 투쟁과 의식에 미치는 영향은 모순적이다. 고통전가에 대한 대중의 분노는 함께 뭉쳐 싸워야 한다는 정서를 자극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잘 이해한다면 좌파는 경제 위기 속에서도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

■ 연대기금이 단결에 도움이 되나?

노동운동 안에는 연대의 방안으로 제시됐지만 실제로는 연대에 도움이 안 되거나 심지어 방해가 되는 제안들이 꽤 있다. 그중 하나가 연대기금이다.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등의 지도자들은 비정규직과 청년 일자리를 위한 '연대기금'을 추진하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의 일부를 떼어 기

금을 내면, 사용자들의 양보도 끌어낼 수 있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그간의 경험은 그것이 설사 선의에서 출발했다 해도, 사용자의 양보는 거의 끌어내지 못한 채 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양산의 책임이 있다는 이간질만 강화하는 효과를 냈다.

실질적 연대 강화는 도리어 방해가 됐다. 대표적으로 금속노조 기아차지

부 김성락 집행부의 '나눔과 연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원망과 불화를 낳았다. 전체 임금 몫을 늘리기 위해 투쟁하는 게 아니라, 줄어든 몫을 두고 노동자들끼리 아웅다웅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연대의식은 정규직의 임금 양보가 아니라 더 나은 조건을 위해 함께 단결해 투쟁할 때 고취될 수 있다.

■ 비정규직 위해 정규직 요구를 내려놔야 할까?

어떤 사람들은 비정규직을 위해 정규직이 자기 요구를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좌파가 정규직의 노동조건 개선 요구나 투쟁을 외면하면 노조 지도자들이 투쟁을 회피하거나 호지부

지 하는 것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것이다.

좌파 활동가들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한껏 지지하면서 동시에, 그 힘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쟁취하는 데도 사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조직 노동자들의 요구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대립시키면 이런 효과를 낼 수 없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요구를 결합시키고, 연대를 확대하도록 애써야 한다.

■ 1사1노조는 비정규직을 통제할 뿐인가?

진보·좌파들은 대부분 기아차 노조 분리에 반대했다. 그런데 일부는 1사1노조가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노조 지도부의 통제를 낳는다며 사실상 회의론을 펴기도 한다.

그러나 지도부의 관료적 통제는 노조가 분리돼 있어도 피해갈 수 없는 문

제다. 일례로, 지금 한국지엠 창원의 정규직 노조 집행부는 파업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더러 단기 계약직에 대한 해고를 수용하라고 압박하며 사실상 투쟁을 통제하려 한다.

관건은 기층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를 강화하고, 이런 힘으로 미립

지 못한 노조 지도부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분리된 노조보다 하나의 노조 안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함께 활동하면서 연대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도 좌파 활동가들의 의식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투쟁하는 비정규직과의 연대야말로 효과적인 조직화 방안

민주노총과 산하 조직들은 미조직·비정규직 조직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그런데 모순적이게도 일부 지도자들은 투쟁에 나서기 시작한 비정규직을 지원함으로써 조직을 확대하는 일에는 미온적인 경향이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조합원이 되기까지 여러 노조들을 뱅뱅이 돌아 간신히 금속노조 경기지부로 가입하는 경로를 밟았던 일은 잘 알려져 있다.

올해는 자동차 판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수난을 겪었다. 금속노조 지도부가 노조 가입 승인을 1년이나 미루면서, 일부 노동자들은 사측의 혹독한 탄압에 홀로 방치된 데 좌절감을 안고 노조 하기를 포기하기도 했다. 최근 금속노조가 가입을 승인하기로 했

지만 노동자들을 개별 지부로 뱅뱅이 흩어지게 만들어 여전히 불만을 사고 있다.

기간제 교사들은 또 다른 사례다. 전교조 지도부가 4만 7000명이나 되는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화를 지지하며 그들의 편이 돼 주었다면 조직 확대의 계기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전교조 중집이 정규직화 반대를 표명하면서 기간제 교사들은 좀 더 어려운 조건에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뭉쳐 조직하고 투쟁에 나설 때, 그것을 지원하고 연대하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조직 확대 방안이다.

조직 노동자들이 잘 싸워서 승리의 전망을 보여 주는 것, 같은 부문·작업장의 비정규직 요구를 지지하고 연대하는 것 또한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노동조합 결성을 고무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안

약속한 개혁은 사라지고 이주민 차별이 강화되다

임준형

정부의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초안(이하 기본계획안)이 발표됐다. 2018~2022년에 적용되는 이번 기본계획안은 문재인 집권 기간 동안 시행되는 이주민 정책 전반을 포함하고 있다.

기본계획안은 이주민 '선별 유입'과 통제 강화라는 기존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선별 유입'은 이주민의 국적·재산·학력 등에 따라 입국과 체류 여부를 차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선별 유입' 정책이 "국민 일자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기본계획안도 인정하듯이, 이주노동자들은 "3D 업종 등 인력난 완화 ... (등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경제 위기 속에서도 이주노동자 유입이 거의 줄이지 않았다는 점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기업주들의 수요가 여전히 상당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이주노동자 수는 계속 증가해 현재 100만 명이 넘었다.

애초에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은 3년까지만 체류할 수 있었지만, 일부는 최대 9년 8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됐고, 이제는 '점수제'를 도입해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체류 기간이 연장된 것도 사용자들이 숙련된 이주노동자들을 원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주노동자들이 체류기간을 연장하려면 몹시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야 하지만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부를 자임하면서도 이주민들의 인간답게 살 권리는 외면하고 있다. 올해 8월 20일에 열린 전국이주노동자결의대회

이처럼 이주노동자들을 짧게 쓰고 내보낸다는 고용허가제의 '단기순환 원칙'은 현실에서 무너져 왔다. 정부는 사업장 이동도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제도의 고용허가제를 유지하면서, 일부에게는 장기 체류를 허용해 사용자들의 수요를 충족하는 정책을 펴 온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장기 체류하는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야박하기 짝이 없이 굴고 있다. 아무리 오래 머물러도 한국으로 가족을 데려올 수 없고, 일자리를

잃으면 체류도 불허된다. 영주권을 얻은 후에만 귀화가 가능하도록 해 이주민들의 귀화를 더욱 어렵게 하는 '영주권 전치주의' 도입이나 단속추방 강화 등의 계획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한다.

책임 전가

기본계획안에는 문재인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했던 이주노동자를 위한 개혁 조치가 대부분 빠졌다.

문재인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제29호)과 '강제

근로 폐지에 관한 협약'(제105호)을 비준하고, 국내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ILO 협약들에 따르면, 사업장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고용허가제는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제도다. 그러나 기본계획안에는 사업장 이동 금지 폐지 등의 내용이 전혀 없다.

또, 농축산업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근로기준법 63조 폐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단속할 때 영장을 발급받도록 하는 것, 18세 미만 미등록 이주아동을 '외국인 보호소'에 구

금하지 못하게 하는 공약 등도 기본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체류외국인 증가와 이들의 정주화·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원, 갈등관리 등 사회적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고 그 책임을 이주민들에게 떠넘기려고 한다. 이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 지원이 "국민 역차별" 논란을 낳는다면서 말이다.

결혼이주민 등 정주 이민자에 대해서는 '자립과 참여' 능력을 키운다는 명분으로 복지 지원도 늘리지 않는다. 그러나 '2015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보면, 결혼이주자 가정의 월평균 가구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32.6퍼센트나 돼 복지 확대가 꼭 필요하다.

기본계획안은 한국 정부가 난민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듯 묘사한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한국의 난민 인정 비율은 3퍼센트도 채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난민 인정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은 없다.

이처럼 이번 기본계획안은 이주민에 대한 정부의 차별과 통제 강화를 정당화하며, 문재인이 내놓았던 부실한 이주민 관련 공약마저 거둬들이고 있다.

실업의 책임을 이주민에게 전가하고, 이주민 복지 지출이 낭비라며 줄이는 정책에 반대해야 한다. 이는 실업과 복지 부족의 책임을 정부나 사용자들이 아닌 이주민에게 돌려 노동계급을 분열시키는 효과를 낸다. 그리고 경제 위기 시기에 가장 취약한 집단의 권리와 복지 축소는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복지를 줄이는 공격으로 이어지기 쉽다.

건설노조 내 이주노동자 배척 논란

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활동가들의 구실이 중요하다

장우성

건설노조 안에서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논쟁은 오래 지속돼 왔다.

2014년 말부터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 지도부가 '외국인력 불법 고용'(미등록 이주노동자 고용)을 반대하며 이주노동자 배척을 공식화하기 시작했다. 2016년 11월 전주에서는 건설노조 간부들이 조합원들을 동원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 조력하는 일마저 벌여졌다.

노동자 운동 내에서 이에 대한 항의가 잇따랐다. 민주노총과 노동단체들은 건설노조를 비판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그럼에도 건설연맹과 건설노조 지도부는 2017년 대(對) 정부 요구에 '외국인력 불법 고용 근절'을 포함했다.

2월 9일 열린 전국건설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이주노동자 배척에 반대하는 대의원들은 '외국인력 불법고용 근절' 삭제를 요구했다. 건설노조 지도부

는 노조 안팎의 비판을 의식해 '이주노동자 배척 행위가 재발해선 안 된다'고 한 발 물러섰다. 그러나 "건설현장 불법고용 근절"로 문구만 수정해 문제가 재발할 여지를 남겼다.

결국 얼마 못 가 일부 건설현장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출입 금지'가 재개됐다. 지도부도 6월 20~21일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의 최대 규모 상경 집회에서 "내국인을 고용하라"는 요구를 내걸었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

건설노조 지도부는 고용 불안이 극심한 '건설업의 특수성' 때문에 미등록 이주노동자 배척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건설현장의 적폐인 '불법 도급'을 없애려면 '외국인력 불법고용'을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최하층의 사용자들'이 이주노동자를 고용해 혹독하게 착취하면서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떠받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불법고용' 단속이 강화되면,

이런 구조가 무너질까?

1980년대 미국에서 '불법 고용' 사용자 처벌 강화가 시행됐는데 이는 이주노동자 감소가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의 처지 악화만을 불러 왔다. 사용자들은 이주노동자에게 처벌에 따른 벌금 등 여러 위험 부담을 전가했다. 결국 더 열악해진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는 노동자 전체의 조건을 악화시키는 압력이 됐다.

게다가 지금 건설 노동자들이 일자리 감소에 봉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건설경기 호황으로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 조합원들이 급증했는데, 이들은 더 나은 임금과 노동조건을 보장받길 원하고 있다.

따라서 다단계 하도급이 낳는 노동조건 악화의 책임을 이주노동자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 그들은 건설현장에서 가장 열악한 조건으로 고통받는 희생자들이다.

최하층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직하고 함께 싸우는 것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균

열을 내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

올해 2월, 과천 한 건설 현장의 투쟁은 좋은 사례다.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이주노동자들 연대 호소에 화답해 함께 싸운 결과 둘 모두의 요구(체불임금과 단협불이행 해결)를 쟁취했다.

좌파의 구실

지난 몇 년 동안 건설노조에서 이주노동자 배척이 강화된 데는 일부 좌파들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토목건축분과와 지역 지부의 지도부를 맡은 노동전선이나 변혁당 소속 일부 활동가들은 2014년 하반기부터 '불법 고용' 반대에 동조하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주노동자 배척에 반대하고자 애썼던 이들이 이렇게 입장을 바꾼 것은 정말이지 안타깝고 유감스런 일이다.

이들은 처음에는 "취약한 수도권 조직 확대"를 위해 사용자의 '불법 고용'을 약점으로 삼아 공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도권 조합원이 5배 가까이 성장한 지금도 "노

조가 '불법'(미등록 이주노동자 고용)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정당화한다.

그러나 이는 사용자들의 인간질 앞에 노동자들을 무장해제시키고 결국 조직력 악화를 불러올 근시안적인 대처일 뿐이다.

좌파들이 노동계급의 단결 원칙을 그저 추상적인 원칙으로 모셔 두고, 현실은 다르다면서 무원칙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전술'이라고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

건설노조 조합원들 가운데는 이주노동자와 연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올해 초 포항에서 이주노동자 단속반에 항의해 이주노동자들을 보호했던 조합원들처럼 말이다.

좌파들은 이런 노동자들과 함께 이주노동자 배척에 반대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가야 한다. 노동계급의 단결은 사용자에게 맞서 노동자들의 힘을 키우는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무기다.

민주노총 임원 선거 운동 시작되다

김하영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조직노동자운동팀장

민주노총 제9기 임원 선거가 4개 후보조가 입후보한 가운데 시작됐다. 아직 선거운동 초기여서인지 후보 진영의 정책 공약 자료가 다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제주·부산·울산 유세를 통해 각 후보조 강조점의 윤곽은 드러났다.

이번 선거의 핵심 쟁점은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와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민주노총을 위한 전망이나 혁신 과제도 상당 부분이 문제와 관계있다.

노사정위 참여

문재인 정부와의 대화에 가장 적극적인 후보조는 윤해모-손종미-유완형 후보조(기호3번)다. 4개 후보조 가운데 가장 온건한 팀으로, 사회연대노동포럼 유관 후보조이다. 윤해모 위원장 후보는 전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을 지냈고, 사회연대노동포럼 공동운영위원장이다.

사회연대노동포럼은 지난 대선에서 공개적인 문재인 후보 지지 활동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윤해모 후보는 부산 유세에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데 일조한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에서 민주당 지지를 열어둬야한다고도 했다.

그 단체의 초대 상임대표였던 인사가 바로 문성현 노사정위 위원장이다. 문성현 씨는 대선 때도 문재인 캠프 노동선대위원장을 지낸 친문 인사다. 그러니 3번 후보조가 노사정위 참여에 열의 있는 게 이상할 게 없다.

윤해모 후보는 부산 유세에서 민주노총을 비판했다. "지금처럼 대안 없는 투쟁, 참여 없는 반대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윤해모 후보가 말하는 대안은 사회연대임금, 사회연대복지 정책이다. 그리고 '참여'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다.

윤해모 후보조가 내건 슬로건, "끌려갈 것인가 주도할 것인가"는 사회적 대화에 적극 참가해 주도하겠다는 뜻이다. ('주도'하겠다는 생각은 환상이라는 반론에 부딪힐 수 있다.)

청소노동자인 손종미 수석부위원장 후보는 "현장을 잘 모르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참여'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문제는 계급 간 이해관계의 충돌이지 현장을 잘 몰라서가 아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데서 잘 드러났듯이 말이다.

"반대와 저지를 넘어"서 대화?

4개 후보조 가운데 스펙트럼상 중간에 자리잡은 두 개조가 있다. 하나는 조상수-김창곤-이미숙 후보조이고, 다른 하나는 김명환-김경자-백석근 후보조다.

이 둘은 윤해모 후보조와는 달리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에 대한 의존을 경계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대에 맞게 산업과 정부 등 각급 교섭 공간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후보조 모두 "교섭(대화)과 투쟁"의 병행



노동계 초청 청와대 만찬. 이번 민주노총 임원 선거의 핵심 쟁점은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이다



11월 9일 민주노총 임원 선거 울산 유세

을 주장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강조점은 분명 "교섭(대화)"에 있다.

김명환-김경자-백석근 후보조(기호1번)는 전통적인 국민과 성향의 후보조로, 산별노조 강화와 "정치세력화 계속 추진"을 주장한다. 산별을 중심에 세우고 진보정치 대통합을 주도할 수 있는 탐임을 내세우고 있다.

김명환 후보조는 "반대와 저지를 넘어"서야 한다며 "대화와 투쟁 병행", "노동의 미래 주도"를 강조한다. 그동안 반대와 저지 투쟁만 한 것이 문제였다는 온건한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셈이다. 김명환 위원장 후보는 이렇게 역설했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사회적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고립" 극복이나 "사회연대전략"도 빠질 리 없다.

이런 리더십 개념에 따르면, 투쟁은 마치 기본이나 되는 양 논의가 되고, 문재인 시대 노동조합 지도자의 자질은 교섭력에 달려 있는 것이 된다.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후보는 이를 뒷받침하고자 부산 유세에서 이렇게 말했다. "박근혜 시절에는 투쟁만 잘하면 됐지만 문재인 시대는 복잡하다."

김명환 위원장 후보는 23일간의 철도 파업을 이끈 철도노조 지도자로 잘 알려져 있다. 백석근 사무총장 후보는 김 후보가 철도파업을 승리로 이끌어

민영화를 저지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3일간이나 파업에 참가한 철도 노동자들은 영웅적이었지만, 당시 김명환 위원장은 아무 성과를 얻지 못한 채 파업을 일방 종로시켰다. 눈물을 삼키며 현장에 복귀한 노동자들은 강제 전출 등 보복과 노동조건 악화를 겪어야 했다.

"연대노조"와 정규직 양보

조상수-김창곤-이미숙 후보조(기호4번)는 "당당하게 만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주요 슬로건의 하나로 내세웠다. 조상수 위원장 후보는 부산 유세에서 민주노총의 청와대 면담 불참을 비판하며 비전과 전략이 없으니 우왕좌왕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

조상수 후보조가 제시하는 비전과 전략의 하나는 '사회적 대화' 참여다. 기업과 국가(둘 다 자본주의 조직인데)의 운영에 노동자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영 참가, 초기업단위 교섭, 노·정 협의의 제도화, 사안별 노사정 대화 등이 그것이다.

조상수 후보도 투쟁과 교섭의 '병행'을 주장하지만, 그의 비판은 명백히 투쟁 우위 방식과 노동운동 좌파를 겨냥하고 있다. 그는 3년 전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후보로 나섰을 때, 스스로 민주노총 임원 선거의 한상균 후보조와 같

은 편처럼 보이기를 원했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조상수 후보는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을 지낸 3년 동안 상당히 오른쪽으로 이동한 것이다.

조상수 후보조는 대안적인 노조의 상으로 "연대노조"를 제시한다. 연대임금, 일자리연대, 복지연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강조점은 조상수 후보조가 사회연대, 사회운동노조를 강조해 온 노동조합 실무자들과 정파의 뒷받침을 받고 있는 것과도 관계가 있다.

조상수 후보는 울산 유세에서 "자본이 정규직 양보로 격차 해소를 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자신이 말하는 연대임금, 일자리연대 등은 정규직 양보론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그러나 그는 "정규직 양보를 할 것인가, 재벌의 공간을 열 것인가" 하고 묻고는, "입체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어물쩍 넘어갔다.

그의 실천을 봐도 그가 말하는 "연대노조"와 정규직 양보 사이에 만리장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조상수 후보가 위원장이던 시절 공공운수노조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규직 양보안들을 제시한 바 있고, 공공상생연대기금도 추진했다. 문재인은 연대기금 추진을 매우 환영했다.

"투쟁 없는 교섭은 쟁취도 어렵다"

4개의 후보조 가운데 가장 왼쪽에 이호동-고종환-권수정 후보조가 있다. 이호동 후보조는 현 한상균 집행부의 계승을 자임하고 있다. 부산 유세에서 이호동 후보는 "한상균 집행부의 성과를 계승하고 한계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이호동-고종환-권수정 후보조는 "투쟁 없는 교섭은 쟁취도 어렵다"고 강조한다. 사회적 대타협은 "노동자 양보의 강제"라며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의 힘이 있을 때만 대등한 교섭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다른 후보조와의 두드러진 차이점이다.

이호동 위원장 후보는 38일간의 발전노조 파업을 이끈 것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권수정 사무총장 후보는 자신의 투쟁 경험을 바탕으로 '조바심을 내며 투쟁을 그르치지 않는 독심'과 '연대'를 승리의 비결로 강조했다. 그는 현대차 아산사내하청 해고자다.

이호동 후보조는 민주노총을 "노동자들의 희망이 되는 조직, 투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주장한다.(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는 아직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특히, 노동조합 좌파들이 한편으로 '대기업 정규직 이기주의'론의 영향을 받고 다른 한편 노동조합 내 온건화 압력에 응답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는 매우 중요하다. 좌파의 단결, 더 나아가 노동계급의 단결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타깝게도, 지난 임원 선거 때와 달리 이번 선거에서는 좌파의 단결이 약화했다.(그 이유에 대해서는 본지 223호 '민주노총 임원선거 운동, 어떻게 되고 있나?'를 참고하시오.)

이호동 위원장 후보는 지난 11월 4일 3단체(노동전선, 노동당 노동위, 변혁당)와 일부 활동가들이 참가한 '전국활동가대회'에서 좌파 공동후보로 선출됐다. 그러나 이후 노동당 노동위가 공동대응에서 철수하기로 하고 변혁당도 별로 열의를 보이지 않으면서 좌파 공동대응 선본 활동은 일단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좌파 후보들이 단결을 위한 대안을 잘 제시한다면 전투적 조합원들을 설득할 수 있다.

노·사·정 동반자관계 중시론이 노동조합의 헤게모니를 잡지 못하도록 좌파 후보들의 선전을 기대한다.

KT노조 선거

민주파 후보로 나선 이상호 후보에게 지지와 연대를!

이원준 KT전국민주동지회 활동가

KT에서 노조 선거가 진행 중이다. 박근혜를 끌어내린 투쟁의 여파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파 집행부가 들어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긴다.

민주파 진영의 후보인 이상호 KT전국민주동지회(이하 KT민주동지회) 전 의장(사진)이 기호 2번으로 출마했다.

이상호 후보는 2001년 민영화 사전 정치 작업인 114 분사화에 반대하는 투쟁에 참가해 파면당했다. 2014년 사측이 눈에 거슬리는 노동자들을 밀어내려고 설립한 업무지원단에 맞서 '업무지원단 철폐 투쟁위원회'를 조직하고 집행위원장을 맡는 등 투쟁을 주도했다. 박근혜 퇴진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최근 트럼프 방한 반대 투쟁에도 열의 있게 참가했다.

불법 선거 개입

2002년 한국통신 민영화 이후 KT에서는 계속된 구조조정으로 4만여 명이 쫓겨났고 이 자리는 비정규직으로 대체됐다. 2014년 박근혜의 낙하산으로 부임한 현 황창규 회장은 8000여 명을 강제로 명예퇴직시켰고,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제도를 폐지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친사측 노조 집행부도 이를 적극 수용했다. 2009년 성과연봉제 도입이나 2013년 저성과자 해고제도 도입 때처럼 말이다.

KT의 민주파 활동가들은 KT민주동지회를 결성해 사측의 공격에 맞서는 구심 역할을 해 왔고 민주노조를 만들기 위해 선거 도전도 계속했다.

사측은 민주파의 당선을 막으려고 온갖 불법과 부정을 저질렀다. 노조 선거 때마다 직원 성향을 분석한 후 일대일 면담으로 회유하고 협박해 사측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강요했다. 게다가 친사측 집행부는 투개표소를 잘게 쪼개 10~20명 단위로 투표하도록 만들어, 누가 사측 후보에게 투표하는지를 사측이 쉽게 감시할 수 있도록 도왔다.

바람

하지만 최근에는 조합원의 자신감이 살아나는 조짐이 있다. 이상호 후보와 7개 지방본부의 민주파 후보들이 지난 선거보다 두 배 가까운 수의 추천 서명



사진 출처 KT전국민주동지회

을 받아 후보 등록에 성공했다.

민주파 후보가 유세할 때 조합원들의 지지 표현도 예전보다 많아졌다. 아마도 박근혜 퇴진 촛불운동의 승리가 KT 노동자들의 자신감에 좋은 영향을 줬기 때문일 것이다. KT 노동자들은 퇴진 촛불에 적극 참가했다. 그렇지 않은 노동자들도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열린 촛불 집회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특히 KT 회장 황창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자다. 다수의 KT노동자들은 황창규를 '적폐'로 보고 있다. 한편, 친사측 후보는 삭발하고 붉은 머리띠를 묶고 출마했다. 가당찮은 일이지만 조합원의 정서가 어떨지를 보여 주는 현상이다.

9월 13일 출범한 'KT 적폐 청산! 민주노조 건설! 비정규직 정규직화! 통신 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시민공동대책위원회(약칭 'KT민주화연대')도 이번 선거에서 민주파에 적극 연대하고 있다.

KT민주화연대의 연대 활동은 KT민주동지회 활동가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선거에 나가는 데에 도움이 된다. KT 노동자들이 민주파 후보 지지를 드러낼 수 있게 자신감을 높이는 효과도 주고 있다.

민주파 이상호 후보가 당선한다면, 이는 지난 20여 년간 민영화와 구조조정에 시달린 KT 노동자들이 자신감을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부당 노동 행위를 일삼고 노동조건을 마구 공격해 온 KT에서 민주노조 깃발이 세워진다면 다른 부문 노동자들에게 좋은 효과를 낼 것이다. 통신 공공성 강화와 KT 재국유화를 요구하는 투쟁, KT 그룹사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연대 투쟁을 건설할 자신감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사진 출처 KT전국민주동지회

11월 7일 노조선거불법개입 및 투개표소 쪼개기 규탄 기자회견

촛불 개혁 과제 이행률 2%

문재인 반 년은 임기의 나머지를 미리 보여 준다

김문성

〈조선일보〉와 함께 대표적인 보수 언론인 〈동아일보〉는 11월 10일자 문재인 6개월 평가 기사의 제목을 “‘미래-인권’ 사라진 적폐 청산”으로 뽑았다. 〈동아일보〉의 기사는 문재인 정부의 첫 반 년이 '적폐 청산'으로 요약된다고 했다. 그리고 적폐 청산 수사는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에 초점을 둔 것으로, 이명박과 박근혜를 겨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적폐 청산에 '새 권력의 정치 보복' 프레임을 씌워 몰타기하는 우파의 전형적 수작이다. 도대체 우익은 “미래”와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 이 신문의 독자에게 굳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까?

그럼에도 〈동아일보〉가 현 정부 반 년 동안 전임 정부 숙청하기용 '적폐 청산'만 두드러진다고 한 건 그 자체로는 맞는 말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구 여권 청산의 명분과 동력을 촛불의 적폐 청산 염원에서 빌려왔다. 그러나 사회의 불평등과 부정을 바꾸는 개혁에는 턱없이 못 미치거나 심지어 때로 배치된다.

인적 청산도 아주 미흡하다. 인사 개혁 문제에서도 송영무, 박성진(낙마), 박기영(낙마), 박형철, 탁현민 등 우익적이거나 부패한 인사들을 내각과 청와대에 등용하려고 해 실망을 샀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는 불평등 해소 문제와 안보 문제에서 오히려 등을 돌리고 약속을 어기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감히 촛불 정부를 자임하지만, 촛불 운동을 정권 교체의 동력으로만 제한해 이용하려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민주당은 정권 퇴진에 반대하면서 박근혜와 물밑 거래를 하려 했다. 서울에서 100만이 넘는 정권 퇴진 시위가 벌어진 뒤에도 문재인은 “질서 있는 퇴진”(퇴임 후 안전 보장)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자신이 정치적 '혼란'을 해결할 수 있음을 지배계급에 보여 주려 했던 것이다. 비록 지배계급의 제2선호 정당이어도 민주당은 명백한 친자본주의 정당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받는 일자리·임금·부동산 정책 등에서 정작 친노동적인 면을 민주당 정부에서도 발견하기 힘든 이유다.(오히려 경제팀은 노무현의 “좌파 신자유주의”를 계승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계급에 떠넘겨 경제·안보 위기에 대처하려는 지배계급의 기본 프로젝트에서 이탈할 생각이 없다.

적폐 청산? 적폐 연장?

그래서 문재인은 대통령의 명령으로 즉시 이행할 수 있는 일도 미루고 피해 왔다. 퇴진 촛불 1주년 집회를



진비 기자

문재인 지지부진한 개혁이나 개혁 배신을 지지하려고 촛불 든 게 아니다

주최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는 촛불 100대 과제 이행률이 2퍼센트라고 발표했다. 이 기구의 대부분은 문재인 정부와의 협치를 바라는 입장이었는데도 말이다.

특히 9월 초 6차 북한 핵실험 이후로는 정부는 미국의 강경 대북 압박에 더한층 참철 공함으로 호응하고 있다. 9월 7일에는 경찰 폭력을 동반하며 사드를 전격 추가 배치했다. 11월 한미 정상회담에선 각종 첨단 무기 구매에 합의했다. 평화를 위협할 뿐 아니라 복지 확대에 차질을 줄 일인 것이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파기는커녕 재론될 기미조차 없다.

국정원 등이 주도한 탄압으로 확인된 일들에서도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 민주노총 한상규 위원장 등 양심수 석방, 전교조·공무원노조의 인정 등이 그것이다.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살인 진압 탓에 죽었다는 걸 인정하는 데에 거의 다섯 달이 걸렸고 경찰 지휘부의 핵심 책임자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박근혜의 대표 노동개혁이던 성과연봉제는 폐지했지만, 이번에는 직무성과급으로 추진할 태세다. 최저임금 인상도 무력화하려 한다. 대통령이 직접 방문한 인천공항의 경우까지 포함해 비정규직 제로 공약은 누더기가 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일자리와 복지 확대 예산이 충분히 반영된 것도 아니다. 예산안을 내면서 문재인이 한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경제라는 말이 39번, 성장이라는 말이 15번 나왔으나 분배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트럼프 방한 항의 집회에는 경찰 적폐의 상징인 차벽과 채증 카메라가 등장했다. 트럼프는 한국 국회에서 환영 박수를 받으며 미국이 이식한 자유 '민주주의'를 찬양했다.

박근혜 파면 이후 세월호가 인양되고 선체 조사가 시작됐지만, 금세 더디고 답답한 예전 상황으로 돌아갔다.

책임 떠넘기기

개혁 지지부진(과 외면)에 쌓이기 시작한 불만에 문재인은 국회로 공을 넘기는 것(정치적 대화)으로 대처한다.

전교조 등의 노조 인정은 국회가 ILO 협약을 비준한 이후에 하기로 미뤘다. 세월호는 정부 차원 조사기구를 설치하기로 한 공약을 취임 석달 만에 철회하고는 국회로 공을 넘겼다. 하지만 올 11월에 통과될 거라고 정부가 장담한 '사회적참사진상규명특별법'(2기세월호특조위법)은 통과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게다가 추가 의혹이 드러나는데도 검찰에 수사를 지시하지도 않는다.

분명 자유한국당 등 우파가 개혁을 반대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집권해 놓고 우파를 핑계 삼을 거면 애초에 '대통령' 선거에서 입법 공약은 왜 냈는가? 대통령 직권으로 당장 할 수 있는 일들도 안 하면서 우파 핑계를 대는 것은 군색한 책임 회피다.

문재인이 또다른 책임 회피 방식은 민감한 쟁점을 노사정 등 '사회적 대화' 방식으로 풀어 가겠다는 것이다. 이명박과 (특히) 박근혜 때처럼 개혁을 일방으로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소통으로 보일 수 있지만, 문제는 대화 테이블에 올라온 차림표가 구 여권의 그것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안보 문제에서 촛불 염원을 크게 배신한 것 때문에 노동개혁을 서두르지는 못하고 있지만 말이다.

이는 아래로부터의 커다란 압력이 없다면, 지배계급이 동의하는 개혁 어젠다를 정부가 언제든지 추진할 수

▶ 15면으로 이어짐

한미 정상회담

대대적인 군비 증강을 선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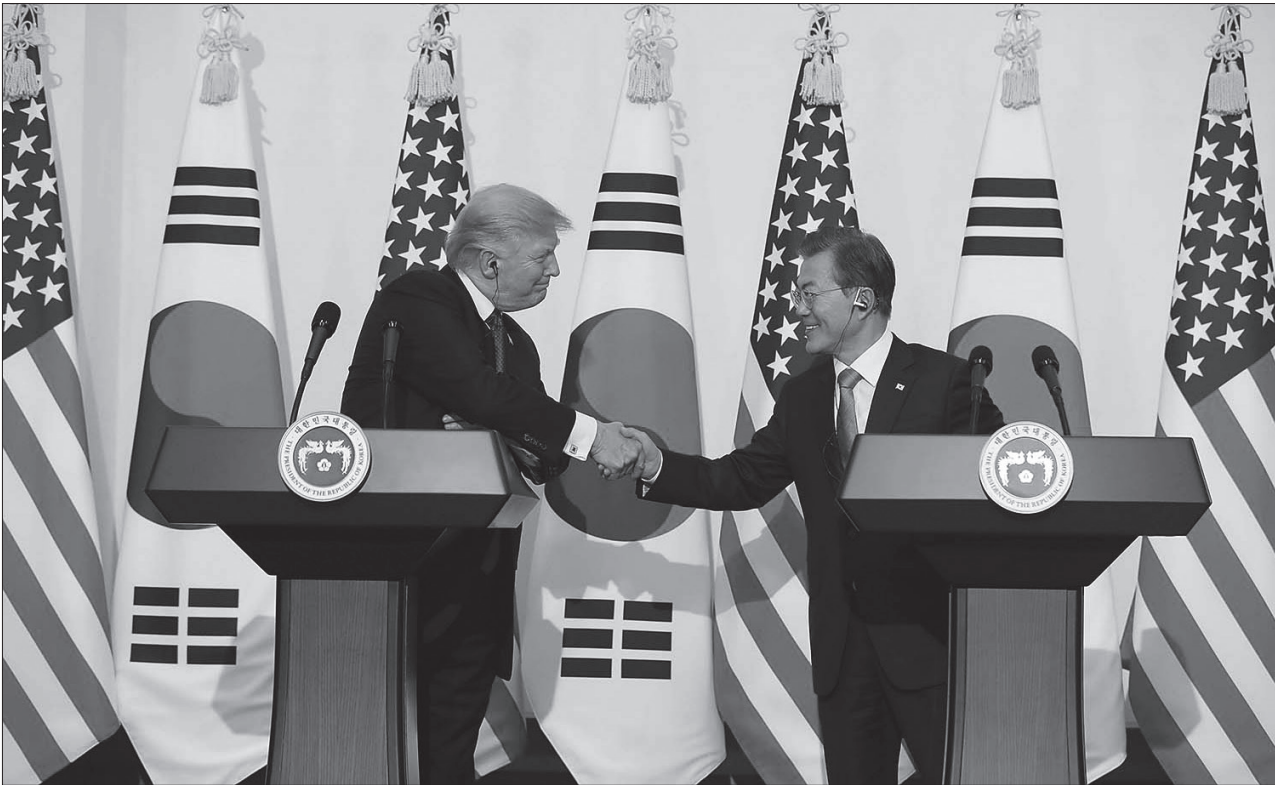
김승주

11월 8일 한미 양국이 공개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언론발표문은 트럼프가 국회에서 연설한 ‘대북제재와 압박 우선, 대화는 그다음’이라는 대북 강경 기조를 재천명했다. 미국 우선주의와 제국주의적 요구를 문재인 정부가 대체로 수용하고 동의했음도 보여 준다.(관련 기사: 국회에서 대북 위협을 되풀이한 트럼프: 한반도 긴장 고조 중단하라!)

우선 한미 양국은 “북한이 전 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식상한 명분을 되뇌이며 미군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강화, 한국의 탄도미사일 탄두 중량 해제, 한·미·일 연합 군사 훈련 지속 등 훨씬 더 위협한 군사 위협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특히 트럼프는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 번영을 위한 핵심 축임을 강조”함으로써 한·미·일 동맹의 강화·확대를 촉구했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일본, 호주, 인도를 묶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트럼프의 전략이다. 이는 ‘일본과 군사 동맹은 없다’던 문재인 정부의 ‘3불’ 기조와 다르다.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공동발표문이지만 트럼프만 한 말”, “사실상 처음 들어 보는 말”이라며 급히 부인했다. 그러나 앞으로 미국 측이 공동발표문



선택 문재인은 대중의 평화 염원 대신 트럼프와 손잡았다

을 디딤돌 삼아 군사 동맹 강화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실제로 한·미·일 군사 동맹이 강화될 것임을 보여 주는 조짐이 많다.

일부 언론은 트럼프의 “누그러진 말투”에 세계가 놀랐다고 호들갑을 떠난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제는 힘의 시대”라며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미국을 “시험하지 말라”고 읊었다. 자신과 함께 핵항모 3척이 동아시아로 왔음도 과시했다. 이 핵항모들은 11일부터 군

사 훈련에 나서고, 한국과 일본은 각각 일정을 달리해 이 훈련에 동참한다.

130억 불

한국은 미국의 군비 부담 증액 주문에 호응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미국산 무기 수입 등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기로 했다. 미국은 “한국이 지난 3년간 미국으로부터 130억 불 이상의 군사 구매를 한 점에 주목”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까지 국방예

산을 상당한 규모로 증액할 계획”이라고 예산이 “미국산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트럼프는 한국에 경제적 부담도 떠넘겼다. “미국의 상당한 규모의 대한 무역 적자를 감소시키고, 상호호혜적인 무역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미FTA를 균형되게 조정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42개 한국 기업들이 향후 4년간 … 총 575억 불 상당의 미국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구

매 계획”을 내놓으며 트럼프의 기대에 부응했다.

문재인은 “주로 탈북민들에게서 들을 수 있는 처참한 회고담과 다르지 않았”(〈한겨레〉사설)던 국회 연설을 한 트럼프를 국민으로 모시느라 평화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 사람들을 경찰력으로 제지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외교력을 발휘해 평화 메시지가 나오길 바란 개혁주의적 기대에도 금이 가고 있다.

한국 지배계급은 미국 제국주의가 주도하는 세계 질서 아래에서 그에 합류하며 나름대로 경제·군사 강국으로 안착하기를 바란다. 따라서 “트럼프가 무기 강매 식으로 나온 것도 사실이지만, 문재인은 단지 힘이 없어 무기를 사 주는 게 아니다. … [이것은] 한반도 내 경쟁 지배계급(북한)에게 확고한 우위를 확보해 자존심을 세우려는 한국 지배자들의 염원이 투영된 능동적 ‘선택’이다.”(관련 기사: 11·8 트럼프 국회 연설 반대 행동 현장 소식)

한편 ‘인도-태평양 전략’ 논란이 보여 주듯, 한국 지배계급은 중국이라는 코앞의 강대국과도 잘 지내야 한다는 압력을 동시에 받는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난처해지곤 하지만, 이번에 한미 양국이 합의한 내용은 여전히 한국 정부가 군사력과 경제력 면에서 강력한 미국의 압력을 거스를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것을 보여 줬다.

▶ 14면에서 이어짐

도 있다는 걸 뜻한다. 마치 노무현이 노사정위원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비정규직 개악 법안 등을 한나라당과 협력해 통과시켰듯이 말이다.

그래서 노동운동이 독립적으로 세력을 구축하지 않고 정부와 협력해 개혁을 얻으려고 하면,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한 방식일 뿐인 “숙의 민주주의”는 정권의 개혁 회피에 그럴듯한 외양을 부여할 뿐이다.

또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나 신고리원전 중단처럼 기업주들이 반발하는 공약은 사회적 대화로 넘겨 공약 파기의 책임을 회피한다.

신고리 핵발전소 관련 공론화위원회에 진보 엔지오들이 참여했다가 들러리만 선 것으로 끝난 일을 보라. 문재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한반도 평화 운동을 분열시키면서까지 트럼프 방한 반대를 내걸지 않았던 엔지오들은 트럼프 방한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부정적인 기능을 했다.

또 하나 문재인 정부의 책임 회피 방식은 〈한겨레〉, 〈경향〉 같은 친민주당 언론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이들은 하찮은 개혁 제스처를 포장해 주고, 개혁 배신은 상황 논리로 변명해 준다. 그들은 최근에도 퇴진 촛불 1주년 집회에 정부 비판 목소리가 클까 봐, 난데없이 여의도 촛불을 띄우며 힘을 빼려 했다.

퇴진 촛불의 교훈은 거대한 대중 운동이 있을 때만 체제 수호 세력들의 방해를 뚫고 얼마간이라도 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방한에 대한 진보·좌파의 대응

김영익

‘NO 트럼프 공동행동’ 중심으로 벌어진 트럼프 방한 반대 운동에는 규모보다 훨씬 큰 정치적 의미가 있다.

11월 7일 문재인 정부는 흑역사 트럼프 방한 일정에 차질을 빚을까 봐 광화문광장에 이중 삼중의 포위벽을 쳤다. 경찰은 광화문 일대를 진짜 “진공 상태”로 만들고 싶었던 듯하다. 그러나 그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다. “촛불”의 현장인 광화문광장을 둘러싼 문재인 “차벽”은 트럼프 방한 반대 운동의 정치적 파장을 역설적으로 보여 준 것이었다.

한 인상적인 장면을 소개하면, 그날 트럼프와 그 일당들이 탄 차량들이 광화문광장을 빠르게 지나가는데, 한 쪽에서 노인들이 성조기와 태극기를 흔들었지만 반대편에서 젊은이들이 ‘트럼프, 돌아가라’,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적힌 팻말을 흔들었다.

이런 트럼프 방한 반대 운동은 날카로운 논쟁 속에서 건설된 것이었다. 평화주의적인 온건진보 단체들은 “트럼프 방한 반대” 요구를 지지하지 않았다. 그들은 “트럼프 방한 반대”가 그를 국민 초청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내포한다는 점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다.

11월 5일 온건진보 단체들은 “트

럼프 방한에 즈음한” 평화 집회를 따로 열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는 데 주안점이 있는 집회였다. 수천 명이 참가했다. ‘NO 트럼프 공동행동’이 4일과 7일에 개최한 집회보다 더 컸다. 그러나 트럼프 방한 찬성이나 반대나로 양극화한 상황 탓에 그 집회의 정치적 파장은 ‘NO 트럼프 공동행동’의 집회에 훨씬 못 미쳤다.

정의당은 공식정치 안에서 트럼프 방한에 대응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다보니 아쉽게도 트럼프 방한 반대를 표방하지 않았다. 6일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트럼프한테 보내는 공개서한을 내놨, “긴장과 갈등 심화라는 악순환의 촉발자가 아닌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마중물”이 돼 달라는 공허하고 맥없는 메시지를 발표하는 데 그쳤다.

지난 대선에서 200만 표 이상 얻고 사드 문제 등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 온 정의당이 트럼프의 방한과 국회 연설에 반대했다더라면, 트럼프 방한 반대 운동 건설에 좋은 효과를 봤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크다.

원내 정당 중 민중당만이 훌륭하게 도트럼프의 국회 연설에 반대했다.

근조

한미 정상회담과 트럼프의 국회



11월 8일 트럼프 국회 연설 규탄 집회

연설은 트럼프 방한 반대 운동 진영의 주장이 옳았음을 보여 준다. 북한에 대한 적의를 마구 쏟아내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트럼프를 보며 많은 사람들이 반갑지 않은 손님에게 소금 뿌리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한테 두고 두고 부담이 될 것이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트럼프의 국회 연설을 듣고 “30분 내내 반공 교육 받는 것 같았다”고 비난했다. 서재정 일본 국제기독교대 교수의 9일자 〈한겨레〉 칼럼 제목은 아예 “근조, 한반도 평화는 죽었다”였다.

트럼프 방한은 진보·좌파에게 다시 한 번 평화 운동 건설의 필요성을 입증해 줬다. 진보·좌파는 문재인 정부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적이고, 트럼프의 패권 정책에 반대하고, 한국 정부의 협력에 반대하는 평화 운동을 건설할 때 이번 경험을 자양분으로 삼아야 한다.

조직 노동운동의 좌파들도 반제국주의 문제에 심각하게 임해야 한다. 자본주의와 전쟁은 밀접하게 연결돼 있으므로, 자본주의를 반대한다면 군사주의와 제국주의 문제를 부차화해서는 안 된다.



한국GM 비정규직 우선 해고 중단하라

한국GM이 물량 축소와 일자리 부족을 핑계로 비정규직을 우선 해고하기 시작했다. 부평과 창원 공장에서 하청업체가 맡고 있는 공정 일부를 회수(인소싱)하는 등의 방식으로 100여 명을 해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맞서 창원비정규직지회가 부분 파업 등을 벌이자, 사측은 11월 9일부터 대체인력 투입을 시도하고 있다. 지회는 즉각 전 조합원 파업을 벌여 대체인력을 막았다. 이 신문이 인쇄에 들어가기 직전인 10일 현재도 대체인력을 저지하고 있다. 사측이 “생산 차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정은 정상 가동을 위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공격은 계속될 듯하다.

한편, 창원 공장의 하청 업체들은(십중팔구 원청의 지시 하에) 비정규직 중에서도 “장기 직원”의 고용·근속·노동조건을 승계하는 대신, 단기 계약직에 대한 해고를 수용하라는 내용의 협상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창원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장기 직원”인 점을 이용해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며 ‘모든 투쟁을 중단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지회는 옳게도 조합원 토론을 열고 협상안을 거부하고, 모든 노동자들의 총고용 보장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장영진 선전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저도 7년여 동안 10여 차례 계약을 갱신하고 나서야 장기 직원이 됐습니



비정규직 우선 해고를 막지 못하면 공격의 칼날은 정규직으로도 향할 것이다

다. 단기 계약직의 계약이 만료된 것이니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단 한 명의 해고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씩 양보하다 보면 결국 무례량이 돼서, 장기 직원, 나아가 정규직도 공격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30만 일자리

부적절하게도 창원 공장의 정규직 노조(한국GM지부 창원지회) 이두희

지회장은 성명을 발표해 비정규직지회가 협상안을 거부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다른 이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단기 계약직 해고를 수용하는 게 ‘최선’이라는 것이다.

또, “창원 공장이 전국적인 비정규직 투쟁의 거점이 되는 것에 반대한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번 대체인력 투입 저지 투쟁도 외면했다.

아쉽게도 전 공장의 정규직 노조들을 포괄하는 한국GM지부도 비정규직 우선 해고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정규직노조 지도부가 비정규직 해고를 눈 감고 있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정규직노조 지도부의 이런 태도는 사측이 벌이는 이간질 책략의 먹잇감만 될 뿐이다. 이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을 지키는 데도 하등 도움이

안 된다.

흔히 구조조정 과정에서 비정규직 우선 해고는 정규직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졌다. 2001년 대우차 정리해고 때 비정규직 2000여 명이 우선 해고됐고, 2015년 한국GM 군산공장에서 비정규직 1000여 명이 쫓겨나고 난 뒤 그 칼날은 어김없이 정규직을 향했다.

이로부터 얻어야 할 교훈은 당연한 비정규직 우선 해고를 외면하지 말고 함께 연대해 싸워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의 한국GM 위기 상황, 철수 가능성 등을 봤을 때 이번 해고는 일부 비정규직만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그것은 한국GM과 협력업체 노동자 30만 명의 고용을 위협하는 신평탄이다.

따라서 한국GM 정규직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비정규직 우선 해고 반대, 총고용 보장을 내걸고 단호하게 연대를 건설해야 한다. 급속노조도 이 투쟁을 해당 작업장의 투쟁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아쉽게도 현재 비정규직지회만 홀로 싸우고 있습니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창원비정규직지회는 급속노조 소속 노동조합입니다. 지금 이 순간, 급속노조의 지지와 연대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장영진 선전부장)

박성환

한국GM 위기는 노동자 탓이 아니다

일자리 보호 위해 국유화하라

철수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 한국GM이 최근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구조조정에 나섰다.

한국GM 사측은 구조조정의 명분으로 적자를 들고 있다. 2014~2016년 동안 한국GM의 순손실이 2조 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한국GM 사장 카허 카쎌는 매년 5000억 원씩 적자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보수 언론들도 적자의 책임을 노동자들 탓으로 돌리며 노동자들을 비난하고 있다. 회사가 망할 위기에 처했는데, 고임금 노동자들이 자신의 잇속만 챙기려 한다며 말이다.

그러나 한국GM의 위기는 노동자들의 탓이 아니다.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경쟁 격화와 수익성 악화에 대응해, GM본사가 해외 자회사 매각과 공장 철수 등을 추진하고,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에게는 열심히 일한 보좌에 없다.

2013년 이후에 GM본사는 이윤율을 높이기 위해 수익이 나지 않는 호주·인도네시아·태국·러시아 등에

서 생산을 중단했다. 올해는 유럽에서 오펔 매각과 철수, 남아공에서 철수 등을 차례로 진행했다. 최근 GM은 미국에서도 생산 차량 구조조정을 위해 공장 일부를 폐쇄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있다.

그 속에서 한국GM도 심각한 불확실성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한국GM은 전체 생산량의 70~80퍼센트를 수출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GM의 해외 시장 철수에서 큰 타격을 입었다. 지난해 한국GM의 수출은 2012년보다 약 80만 대(반조립제품 포함)나 줄었다.

의도된 부실

게다가 GM본사가 이익을 늘리기 위해 한국GM의 적자를 의도적으로 키우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있다.

한국GM은 최근 5년간 GM본사로부터의 차입금이 2조 4000억 원 가까이 급증했는데, 국내의 다른 자동차 회사의 회사채 이자율보다 훨씬 높은 이자율로 빌렸다. GM본사가 한국GM을 상대로

고금리 돈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GM본사는 유럽·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발생한 손실도 상당 부분 한국GM에 떠넘겼다.

게다가 한국GM의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은 93퍼센트로 다른 자동차 업체들(80~84퍼센트)보다 훨씬 높다. 이른바 ‘이전가격’을 통해 GM본사로 이윤을 몰아 주는 구조인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국GM 사장은 이런 의혹들에 대해 “글로벌 기업이 흔히 사용하는 정책”이라고 뻔뻔하게 답했다.

이처럼 전 세계적인 구조조정과 ‘이전가격’ 덕분에 GM은 지난해 순이익 94억 달러(10조 5000억 원)를 거뒀고, 올해에도 순이익 9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GM본사가 만들어 낸 경영난과 부실의 책임을 노동자들이 져야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GM의 2대 주주(지분 17퍼센트)인 산업은행은 일자리 보호에 나서기는커녕 “한국GM 구

구조조를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다.

산업은행이 갖고 있던 ‘한국GM 자산 처분 거부권’이 소멸되기 얼마 전에는, ‘한국GM의 공장 철수를 막기 어렵다’는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었다. 그동안에도 산업은행은 대출금을 회수하는 데만 신경을 썼지, 한국GM을 제대로 감시·감독하며 일자리를 지키는 데는 큰 열의를 보이지 않았다.

한국GM 철수는 한국GM 노동자 1만 5000여 명과 협력업체 노동자 30만 명의 고용과 임금을 위협하는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GM 문제를 산업은행에만 맡겨 놓지 말고 직접 나서서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

문재인은 대선 후보 시절 “노조 동의 없이 산업은행의 지분을 팔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는 한국GM에서 일자리 보호를 위해 나서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하고, ‘80만 개 일자리 창출’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는 우선 한국GM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 나서야 한다.

한국GM이 고용을 보장할 의지도

능력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는 지금, 일자리를 지키려면 국유화를 요구하며 투쟁을 건설해 나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강동훈

wspaper.org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사회서비스·보육 예산안
**미흡한 공약마저
벌써 후퇴하는 문재인 정부**

★ 미국 재·보선과 ‘미니 지방선거’
**속 시원한 트럼프의 선거 참패,
빈가운 진보 성향 후보의 선전**

★ 카탈루냐
**중앙정부의 구속 탄압으로
거리 투쟁이 다시 불붙다**

★ 성소수자
**트럼프 반대 성소수자
연서명이 보여준 가능성**